

행정법총론

[정답 채점하기]

1	2	3	4	5
②③	④	④	④	③
6	7	8	9	10
②	①	①	①	③
11	12	13	14	15
①	①	①	②	①
16	17	18	19	20
②	③	②	④	③

1. ②③
사면의 종류, 대상, 범위, 절차, 효과 등은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 일반국민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국가 이익과 국민화합의 필요성, 권력분립의 원칙과의 관계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부여되어 있다(헌재 2000.6.1. 97헌바74). 따라서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통치행위에 해당한다.

2. ④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 【공포 및 공고의 절차】 ④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하여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는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3. ④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08.1.17. 2006두10931).

4. ④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관련 조항의 신설로 허가나 신고 없이 개발제한구역 내 공작물 설치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된 경우, 그 법령의 시행 전에 이미 범하여진 개발제한구역 내 비닐하우스 설치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7.9.6. 2007도4197).

5. ③
건설업자인 원고가 1973.12.31. 소외인에게 면허수첩을 대여한 것이 그 당시 시행된 건설업법 제38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건설업면허 취소사유에 해당된다면 그 후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개정되어 건설업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건설부장관은 동 면허수첩 대여행위 당시 시행된 건설업법 제38조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건설업면허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대판 1982.12.28. 82누1).

6. ②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관할관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 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그에게 운전면허 취소사유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관할관청으로서는 비록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운전면허 취소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다(대판 2008.5.15. 2007두26001).

7. 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에 대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것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2011.12.9. 이전에 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 전과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나 일사부재리의 원칙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12.11.29. 2012도10269).

8. ①
폐기물관리법령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와 국토이용관리 법령에 의한 국토이용계획변경은 각기 그 제도적 취지와 결정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다르다는 이유로,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하여 적정통보를 한 것만으로 그 사업부지 토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승인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판 2005.4.28. 2004두8828).

9. ①

헌법 제38조, 제59조에서 채택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은 과세요건과 징수절차 등 조세권행사의 요건과 절차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과세요건과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령·규칙 등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규정하게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규정하게 하는 경우 구체적·개별적 위임만이 허용되며 포괄적·백지적 위임은 허용되지 아니하고(과세요건법정주의), 이러한 법률 또는 그 위임에 따른 명령·규칙의 규정은 일의적이고 명확하여야 한다(과세요건명확주의)는 것이다(대결 1994.9.30. 94부18).

10. ③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를 위반하는 처분은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 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대판 2009.12.24. 2009두7967). 재량준칙 그 자체의 법규성이 직접적으로 있진 않지만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진 경우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등에 따라 간접적인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11. ①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한 사업자로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3.7.16. 법률 제119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에서 정한 자진신고자나 조사협조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이하 '선행처분'이라 한다)을 한 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3항에 따라 다시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사건을 분리하여 자진신고 등을 이유로 한 과징금 감면처분(이하 '후행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면, 후행처분은 자진신고 감면까지 포함하여 처분 상대방이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최종적인 과징금액을 결정하는 종국적 처분이고, 선행처분은 이러한 종국적 처분을 예정하고 있는 일종의 잠정적 처분으로서 후행처분이 있을 경우 선행처분은 후행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이미 효력을 잃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부적법하다(대판 2015.2.12. 2013두987).

12. ①

귀화허가는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귀화허가의 근거 규정의 형식과 문언, 귀화허가의 내용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면, 법무부장관은 귀화신청인이 법률이 정하는 귀화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귀화를 허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재량권을 가진다(대판 2010.7.15. 2009두19069).

13. ①

성업공사가 당해 부동산을 공매하기로 한 결정 자체는 내부적인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위 공사가 한 공매통지는 공매의 요건이 아니고 공매사실 그 자체를 체납자에게 알려주는 데 불과한 것으로서 통지의 상대방인 골프장업자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것 역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98.6.26. 96누12030).

14. ②

한국자산공사가 당해 부동산을 인터넷을 통하여 재공매하기로 한 결정 자체는 내부적인 의사결정에 불과 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한국자산공사가 공매통지는 공매의 요건이 아니라 공매사실 자체를 체납자에게 알려주는 데 불과한 것으로서, 통지의 상대방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것 역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7.7.27. 2006두8464).

15. 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조 【다수인의 질서위반행위 가담】 ②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도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한다.

16. ②

국가배상책임의 주체를 국가 또는 공공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헌법이고 국가배상법상으로는 배상책임의 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규정되어 있다.

17. ③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공공의 영조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를 지칭하며, 공공용물에 한하지 아니하고, 공용물도 포함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대판 1995.1.24. 94다45302).

18. ②

노동위원회법 제27조【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 ①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被告)로 하여 처분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19. ④

과세관청이 조세부과처분을 한 뒤에 그 불복절차과정에서 국세청장이나 국세심판소장으로부터 그 일부를 취소하도록 하는 결정을 받고 이에 따라 당초 부과처분의 일부를 취소, 감액하는 내용의 갹정결정을 한 경우 위 갹정처분은 당초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그 갹정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다투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초의 부과처분 중 갹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 된다 할 것이고, 갹정결정 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경우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도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판 1991.9.13. 91누391).

20. ③

거부처분의 처분성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요건이 되는 신청권의 존부는 구체적 사건에서 신청인이 누구인가를 고려하지 않고 관계 법규의 해석에 의하여 일반 국민에게 그러한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는가를 살펴 추상적으로 결정되는 것이고, 신청인이 그 신청에 따른 단순한 응답을 받을 권리를 넘어서 신청의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6.6.11. 95누12460).

행정학개론

[정답 채점하기]

1	2	3	4	5
③	③	①	②	④
6	7	8	9	10
③	④	②	④	②
11	12	13	14	15
③	①	③	②	①
16	17	18	19	20
①	④	④	②	②

- ③
우리나라 예산편성과정 순서는 다음과 같다.
ㄹ. 중기사업계획서 제출(매년 1월 31일까지, 중앙관서가 기획재정부에 제출)
ㄴ. 예산안편성지침의 시달(3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에서 중앙관서로 시달)
ㄷ. 예산요구서의 제출(5월 31일까지, 중앙관서에서 기획재정부로 제출)
ㄹ. 기획재정부의 예산사정 및 협의
ㅁ. 정부예산안의 확정(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

- ③
효과성은 1960년대 발전행정론의 사고가 지배적일 때 주된 가치판단 기준이었다.

선지분석

- ④ 서울시 OPEN(The Online Procedures Enhancement for Civil Applications)시스템은 과정 투명성의 대표적인 예이다.

정리 투명성의 차원

- (1) 과정 투명성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으로 정부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시민이 참여하는 것으로, '서울시 OPEN(The Online Procedures Enhancement for Civil Applications)' 시스템을 말한다.
- (2) 결과 투명성
집행과정을 통한 결과의 투명성으로서 결정된 의사결정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서울시의 '청렴계약제'나 '시민옴부즈만제도' 등이 있다.

- (3) 조직 투명성

조직 자체의 개방성과 공개성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된 규정·정책·고시·입찰 등을 공개하는 것으로, 각급 행정기관의 공시제도(publicity)의 도입은 대표적인 예로서 조직 투명성을 증대시키는 방안이다.

3. ①
보기의 사례는 '선의의 거짓말'과 같은 백색부패를 설명하는 내용이다. 백색부패는 모든 국민이 용인하는 부패로서 사회체제에 심각한 파괴적 영향을 가져오지는 않는다.

4. ②
옴부즈만제도는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 사법부에 의한 통제나 다른 구제수단에 비해서 시간이 적게 걸리고 비용 또한 저렴한 것이 장점이다.

5. ④
정책결정자의 직관이나 통찰력 등과 같은 초합리성은 최적모형의 특징이다.

선지분석

- ② 정치적 합리성에 기초하여 실제의 결정상황에 기초한 현실적이고 기술적인 모형은 점증모형의 특징이다.

6. ③
정책결정상의 가치중립성의 확대가 아니라 가치지향성이 더욱 확대되는 것이 특징이다. 행정국가의 성립으로 인해서 행정권의 강화나 확대뿐만 아니라 재량범위가 확대되고 정책과정이 동태화되었다.

7. ④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의존재원이므로 지방교부세가 늘어날수록 재정자립도는 낮아진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자립도의 향상 차원에서 지방교부세의 증액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는 않다.

선지분석

- ① 지방교부세재원(내국세의 일정비율)은 국가가 자의적으로 교부할 수 없으며 자치단체 모두가 공유하는 독립재원이다.
- ② 보통교부세는 비도(費途)가 정해지지 않은 일반재원이며 재정력지수가 1이 넘는 경우(서울시 자치구, 수원시, 성남시 등)에는 지방교부세를 교부하지 않는다.
- ③ 지방교부세에 수직적 조정기능이 전혀 없지는 않지만 국고보조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수직적 조정기능은 미흡하다.

8. ②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헌법 제57조).

9. ④

설문의 내용은 최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민자유치 방식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손익공유형 민자사업(BTO-a: Build · Transfer · Operate - adjusted)방식이다.

정리 BTO-rs와 BTO-a 방식

- (1) 위험분담형 민자사업(BTO-rs: Build · Transfer · Operate - risk sharing)
정부와 민간이 시설 투자비와 운영비용을 일정 비율로 나누는 새로운 민자사업 방식이다. 민간이 사업 위험을 대부분 부담하는 BTO와 정부가 부담하는 BTL로 단순화되어 있는 기존 방식을 보완하는 제도로 도입됐다. 손실과 이익을 절반씩 나누기 때문에 BTO 방식보다 민간이 부담하는 사업 위험이 낮아진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공공부분에 대한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방식이다. 최근 포스코 건설로 민자유치가 결정된 “신안산선”에 이 방식이 적용되었다.
- (2) 손익공유형 민자사업(BTO-a: Build · Transfer · Operate - adjusted)
정부가 전체 민간 투자금액의 70%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을 보전해 주고 초과 이익이 발생하면 공유하는 방식이다. 손실이 발생하면 민간이 30%까지 떠안고 30%가 넘어가면 재정이 지원된다. 초과 이익은 정부와 민간이 7대 3의 비율로 나눈다. 민간의 사업 위험을 줄이는 동시에 시설 이용요금을 낮출 수 있는 게 장점이다. 대표적으로 서울경전철 사업, 하수·폐수 처리시설 등 환경시설에 적용하고 있다.

10. ②

롤스(J. Rawls)의 정의론은 효율성의 가치를 달성하려는 노력보다는 공정성의 가치를 달성하는 데에 관심이 있다.

11. ③

장기적인 발전 가능성이나 잠재력을 중시하는 직업공무원제의 수립에 유용한 것은 계급제의 특징이다.

12.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에 기초하여 소관 정책 등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자체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 제3항).

13. ③

공식화 수준이 높은 경우, 조직구성원들의 행동이 정형화·표준화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통제가 용이해진다.

14. ②

징계의 수단으로 제도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강임이 아니라 강등이다. 강임과 강등을 잘 구별해야 한다.

15. ①

과업목표의 달성을 위해 체계적인 관리와 통제를 중시하는 관료제 조직에 적합한 것은 과학적 관리론이다.

16. ①

「국가공무원법」상에 규정된 직위해제 사유는 중징계로, 견책·강등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는 경징계로서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리 직위해제와 직권면직의 비교

구분	직위해제	직권면직
개념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 기간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처분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직권으로 면직(신분박탈)하는 인사처분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실적이 불량한 자 징계의결중인 자(중징계에 한함)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 제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적격심사를 요구받은 자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무능력부족 및 성적불량으로 직위해제된 자가 직위해제기간 중 그 향상이 기대될 수 없을 때 전직시험에서 3회 이상 불합격한 자로서 직무능력이 부족한 자 직제·정원의 개폐 및 예산 감소로 인한 감원 시 휴직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감당할 능력이 없는 자 등 징병검사·입영 등의 명령을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이탈하였을 때 해당 자격증의 효력 상실 또는 면허가 취소된 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결정을 받은 때

17. ④

정부사업의 우선순위 파악이 용이한 것은 영기준예산제도(ZBB)의 장점이다.

정리 품목별예산제도(LIBS)의 장점

- (1) 회계책임 확보와 예산통제 용이
예산과목의 최종단위인 목을 중심으로 예산액이 배분되기 때문에 회계책임의 확보와 예산통제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
- (2) 철저한 예산심의 및 예산남용 방지
공무원들의 재량을 줄여 예산 남용을 방지할 수 있고, 행정부에 대한 철저한 예산심의를 통한 국회의 권한을 강화할 수 있다.
- (3) 이익집단의 저항 회피
예산편성 및 심의과정에서 예산삭감이 이루어질 때 이익집단의 저항을 덜 받는다는 점에서 정치적인 이점을 갖는다.
- (4) 세부적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급여와 재화 및 서비스 구매에 효과적이며,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유용하고 긴요한 각종 자료를 제공해준다.

18. ④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장단(의장,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의결은 가능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불신임의결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19. ②

배분정책은 국가의 예산을 개인이나 기업 지역 및 각 분야별로 나누어 주는 것으로, ㄷ. 사회간접자본(SOC)의 건설, ㄹ. 국공립학교를 통한 교육서비스 제공은 배분정책의 예이다.

선지분석

- ㄱ. 선거구의 신설 및 변경은 구성정책의 예이다.
- ㄴ. 공무원의 보수와 연금확정은 구성정책의 예이다.
- ㄴ. 조세 부과 및 징병제도는 추출정책의 예이다.
- ㄴ. 국경일의 제정 및 준수는 상징정책의 예이다.

20. ②

베버(Weber)의 관료제는 관료들이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비정의성(impersonality)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추구하여 공평무사한 업무 수행을 하도록 한다.

정리 근대 관료제[베버(Weber)]와 후기관료제[맥커디(McCurdy)]의 비교

근대 관료제	탈(후기)관료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층제(계서적 구조) • 업무의 법규기속성 • 비정의성(비개인성) 추구 • 전문화(기능 중심) • 영속성 • 비밀주의 • 고정적 권위와 공식적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lat 조직(구조화된 비계층제) • 상황에 적응하는 변증법적 조직 • 고객을 동료로 취급 • 팀 중심의 문제해결, 집단적 의사결정 • 일시적 편재, 직업의 이동성 • 개방적 의사전달 • 권위의 유동성(문제해결 능력이 있는 자)

세법개론

[정답 채점하기]

1	2	3	4	5
③	④	③	④	③
6	7	8	9	10
④	④	④	④	①
11	12	13	14	15
①	③	④	④	④
16	17	18	19	20
④	③	②	③	④

1. ③

선지분석

- ① 자산수증이익이나 채무면제이익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된 것으로 본다. 즉, 다시 공제할 수 없다.
- ② 결손금은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에 한정한다.
- ④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인가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은 결손금 전액을 공제할 수 있다.

2. ④

선지분석

- ①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은 잉여금처분결의일로 한다.
- ② 무기명 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은 그 지급을 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하며, 기명 채권의 경우는 약정에 의한 지급일로 한다.
- ③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실제로 지급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3. ③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1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1비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다만, 이익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각 구성원별로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진다.

4. ④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환산취득가액과 필요경비개산공제금액의 합계액이 실제로 발생한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의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5. ③

선지분석

- ① 납세자가 납부기한 등의 만료일 10일 전까지 납부기한 등의 연장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그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10일이 되는 날에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 ②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유예의 통지 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인 경우에는 납부기한 등의 연장 승인 통지를 관보, 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고하는 방법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 ④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은 입은 사유로 납부기한 등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없다.

6. ④

선지분석

- ①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본다.
- ②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해당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 ③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하면 2억 원까지만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된다.

7. ④

선지분석

- 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원천 부동산 소득 또는 국내원천 양도소득이 있는 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그 소득이 최초로 발생하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사업연도변경신고서를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이전에 제출한 경우에는 적법한 변경신고로 본다.
- ③ 내국법인이 합병이나 분할에 따라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까지를 그 해산한 법인의 1사업연도로 한다.

8. ④

선지분석

- ① 면세포기신고서는 언제든 제출할 수 있다.
- ② 면세농산물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면세를 적용하며 면세포기를 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 ③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예술행사, 문화행사, 야마추어 운동경기에 대해서 면세한다.

9. ④

사업자가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서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예정 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한다.

10. ①

종합소득공제는 월할 계산하지 않는다.

11. ①

결산조정사유에 해당하므로 법인이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된다.

12. ③

선지분석

- ①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로 한다.
- ② 수시부과하여 징수하는 국세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로 한다.
- ④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법인이 해산하는 때를 성립시기로 한다.

13. ④

선지분석

- ① 관할 세무서장(체납 발생 후 1개월 이상 지나고 체납액이 5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은 납세자가 독촉 또는 납부기한 전 징수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 또는 체납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산의 압류, 압류재산의 매각 등 강제징수를 한다.
- ② 파산한 경우에도 이미 압류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강제징수를 계속 진행한다.
- ③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의 합계액이 2억 원 이상인 경우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를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14. ④

한도를 계산할 때 납부기간 만료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다.

15. ④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않게 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 당일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16. ④

공과금은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관세·임시수입부가세, 지방세와 이와 관계되는 강제징수비를 제외한 것으로 한다.

17. ③

공급받은 자가 받은 판매장려물품은 공급받은 자의 과세표준과 상관없다. 과세표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8. ②

선지분석

- ①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부터 6개월 이내에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③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실제 공급가액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의 차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 ④ 과세사업에 사용하여 오던 자기 소유의 노후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해당 철거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에 해당된다.

19. ③

선지분석

- ① 업무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업무사용비용의 5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 ②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 ④ 3주택 이상을 소유한 임대업자가 주택에 대한 보증금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야 한다.

20. ④

공시송달의 효력은 서류의 주요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회계학

[정답 채점하기]

1	2	3	4	5
④	②	②	②	②
6	7	8	9	10
②	③	④	④	②
11	12	13	14	15
①	②	①	④	②
16	17	18	19	20
②	④	③	③	④

- ④
⇒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1,331 - 500 - 121 = 710$
1) 매출: $1,000 \times 1.1^3 = 1,331$
2) 매출원가: $(-)500$
3) 이자비용: $1,000 \times 1.1^2 \times 10\% = (-)121$
- ②
1) 반환재고회수권: $400 \times 100\text{개} \times 15\% - (200 + 300) = 5,500$
- ②
1) 수익: $6,000 - (4,000 - 2,000) = 4,000$
- ②
1) 기말 매출채권: 기초 1,000 + 외상매출 5,000 - 대손 확정 60 - 현금회수 4,640 = 1,300
2) 대손충당금 T계정
* 기초 50 + 설정 + 대손확정 회수 16 = 대손확정 60 + 기말 1,300 × 5%, 설정액: 59
- ②
현금및현금성자산 : $2,000 + 1,000 + 2,000 + 2,000 = 7,000$

6. ②

차) 이자비용	1,200	대) 미지급이자	200
선급이자	60	현금(역산)	1,060

7. ③

차) 건물	400	대) 감가상각누계액	100
감가상각비	700	처분이익	100
		현금(역산)	900

8. ④

일반적인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의 경우 회계기간동안 그 차입금으로부터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에서 당해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투자수익을 차감하지 않는다.

9. ④

반드시 법적 실체를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10. ②

기계장치 취득원가: $15,000 + 100,000 + 20,000 + 20,000 = 155,000$

11. ①

수익에 기초한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2. ②

- 취득원가: $1,000,000 + 300,000 + 200,000 = 1,500,000$
- 20x2년 말 차량의 장부금액: $\min[1,100,000, 1,500,000 \times 3/5] = 900,000$

13. ①

재평가잉여금: $2,800,000 - (3,000,000 - 3,000,000/10) = 100,000$

14. ④

주식발행초과금: $150,00 - 10\text{주} \times 5,000 = 100,000$

15. ②

차) 임차료	900,000	대)	선급임차료	900,000
차) 공과금	200,000	대)	미지급비용	200,000
차) 선수수익	200,000	대)	수익	200,000

- 1) 자산: (-)900,000
- 2) 부채: 200,000-200,000 = 0
- 3) 비용: 900,000+200,000 = 1,100,000
- 4) 수익: 200,000

16. ②

제조간접비 예산	₩10,000
(÷) 예정조업도	1,000시간
= 제조간접원가 예정배부율	@10
(×) 실제조업도	800시간
제조간접비 예정배부액	₩8,000
실제 제조간접비	₩8,200
제조간접비 배부차이	₩200 과소배부

17. ④

- 1) 꾸러미 공헌이익: $(50-20) \times 1 + (30-10) \times 2 + (20-10) \times 3 = 100$
- 2) 손익분기점 꾸러미 판매량: $4,000/100 = 40$ 개
- 3) 제품 Z 손익분기점 매출액: $40 \times 3 \times 20 = 2,400$

18. ③

$800 = 3,200 \times (\text{생산량} - 300 \text{단위}) \div \text{생산량}$,
 생산량: 400단위

19. ③

선지분석

- ① 부과하는 방식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세액을 고지하는 때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 ② 신고·납부하는 방식의 국세는 국가가 신고한 때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 ④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없다면 법령 등에 따라 지출에 대한 의무가 존재하더라도 비용으로 인식할 수 없다.

20. ④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해당 자산의 차감항목에 표시한다.

국제법개론

[정답 채점하기]

1	2	3	4	5
①	②	③	①	④
6	7	8	9	10
②	①	①	②	②
11	12	13	14	15
③	①	③	③	④
16	17	18	19	20
②	②	②	③	②

- ①
청구의 경합을 해결하는 구체적인 국제법규칙은 부존재한다.
- ②
해적행위에 대한 관할권은 '임의적 보편관할권'의 성격을 띤다. 즉, 보편관할권은 국가의 권리이고 의무가 아니다.
- ③
11인이다.
- ①
오답체크
ㄷ. 군도수역의 내측은 내수이며, 외측은 영해이다.
ㄹ. 군도수역의 상공에 대해서도 배타적 지배권을 갖는다.
ㅁ. 군도수역에서의 원칙적 통항권은 '무해통항권'이다.
- ④
오답체크
① 선진국의 입장이다.
② 행정이사회 의장은 IBRD총재이다.
③ 합의 후에는 양 당사자 모두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다.
- ②
UN사무총장을 통해 통보한다.
- ①
해석상 일방적으로 ICJ에 제소할 수 있다고 하였다.

- ①
국제기구 설립협정도 국가간 체결된 조약이므로 69년 협약의 지배를 받는다.
- ②
상소기구는 패널보고서에 제기된 법률문제와 패널의 법률적 해석에 대해서만 심리한다. 따라서 상소대상이 아닌 사실문제 및 패널이 다루지 않은 법률문제는 상소심에서 다루어지지 않는다. (DSU 제17조 6항)
오답체크
① 상소기구는 패널과 달리 법률, 국제무역 및 대상협정 전반의 주제에 대해 전문지식을 갖춘 공인된 권위자인 상소기구위원 7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소요청시 이중 3인이 무작위로 선정되어 판결한다. (DSU 제17조 1, 2, 3항)
③ 상소는 분쟁당사국만 할 수 있으며 제3국은 상소자격이 없다. 단 실질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분쟁해결기구에 통고하고 패널절차에 참가한 제3국은 제3자로서 상소에 참여하여 상소기구에 서면입장을 제출하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DSU 제17조 4항)
④ 상소기구는 패널 평결 파기시 이를 다시 심리하도록 원 패널에 사건을 반송하는 '파기 환송권'은 없다.
- ②
철회할 의무는 없으나, 패널이나 상소기구가 조정을 권고한다.
- ③
실효적 지배가 선점의 필수요건인 것은 옳지만, 반드시 국가행정기구를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상징적 지배도 인정되기 때문이다.
오답체크
② 서부사하라의 법적 지위에 대한 권고적 의견사건에서 제시된 것이다.
④ 실효적 지배에 있어서 상징적 지배가 인정된다. 판례에 의하면 본토로부터 원격지, 주민이 거주할 수 없는 지역 등에 대해 상징적 지배가 인정되었다.
- ①
주주에 대한 직접피해의 경우 회사의 소멸과 무관하게 주주의 국적국이 보호권을 발동할 수 있다.

13. ③

오답체크

- ① 영국은 미승인국의 국내적 지위에 대해 창설적 효력 설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영국이 승인을 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는 국가행위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비승인국 국내법의 적법성을 심사할 수 있다.
- ② 집단적 승인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④ 이 경우 승인의 효과 자체에는 영향이 없고, 다만 당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 대한 국가책임의 문제가 발생한다.

14. ③

오답체크

- ① 다자조약의 타 당사국은 조약의 '정지'를 위해 동 위반을 원용할 수 있다. 종료를 위해서는 위반국 이외의 모든 다른 당사국의 동의를 요한다.
- ② 후발적 이행불능은 상대적 종료사유에 해당한다. 종료를 위해 동 사유를 원용하되 자동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 ④ 후발적 이행불능 역시 목적물의 영구적 멸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각하였다.

15. ④

당사자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16. ②

해양법협약 제7조 제2항에 의하면 이 경우 직선기선은 이 협약에 따라 연안국에 의하여 수정될 때까지 유효하다.

오답체크

- ① 영국-노르웨이 어업사건은 직선기선의 관습법성을 확인한 판례이다.
- ③ 간조노출지에는 원칙적으로 직선기선을 설정할 수 없다. 다만, 영구적으로 해면위에 있는 등대나 이와 유사한 시설이 간조노출지 위에 세워진 경우 또는 간조노출지 사이의 기선설정이 일반적으로 국제적인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7조 제4항).
- ④ 통상기선이 원칙적이고, 직선기선이 예외적이다.

17. ②

영사관원은 중대한 범죄의 경우 권한있는 사법당국의 결정에 따라 재판에 회부되기 전에 체포되거나 구속될 수 있다.

18. ②

해양법재판소에 잠정조치를 요청한다.

19. ③

타국이 소송의 당사자로 거명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있어서 그 소송이 그 타국의 재산, 권리, 이익 또는 활동에 영향을 줄 목적을 가지는 경우 타국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으로 간주된다[제6조 제2항(b)].

20. ②

국제관습법이 국내법률과 대등하다고 보는 것으로 평가된다.

사회복지학개론

[정답 채점하기]

1	2	3	4	5
③	③	①	②	④
6	7	8	9	10
③	④	③	②	①
11	12	13	14	15
①	④	②	④	①
16	17	18	19	20
②	②	③	①	①

-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는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다. 즉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시·도 단위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 ③
‘순환질문’은 ‘전략적 가족치료모델’에서 활용하는 기법이다.
- ①
반집합주의에 따르면 국가의 개입은 경제적 비효율을 초래하므로 가급적 지양되어야 한다.
- ②
아니마(Anima)는 남성 속의 여성적 원형, 아니무스(Animus)는 여성 속의 남성적 원형을 의미한다.
- ④
‘사회진화론과 민주주의’가 아니라 ‘사회진화론과 인도주의’가 맞다. 참고로 민주주의는 인보관운동가들의 주요 이념이었다.
- ③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유형’이 아니라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 유형’이 맞다.
- ④
‘중재자(mediator)’가 아니라 ‘중개자(broker)’가 맞다. 참고로 중재자(mediator)란 분쟁 발생 시 중립적 입장으로 개입하여 협상이나 타협을 이끌 수 있도록 원조하는 역할을 말한다.

- ③
‘이미분화척도’가 아니라 ‘서스톤 척도(Thurstone Scale)’가 맞다.
- ②
‘공유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공유될 수 있다.’가 맞다.
- ①
생명보호의 원칙이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 ①
‘발전, 발견’이 아니라 ‘발견, 발전’이 맞다.
- ④
‘생활력도표’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망표’가 맞다.
- ②
아내는 ‘클라이언트 체계’, 남편은 ‘표적체계’, 사회복지사는 ‘변화매개체계’, 가족치료전문가는 ‘행동체계’에 해당한다.
선지분석
① 남편은 ‘변화매개체계’가 아니라 ‘표적체계’이다.
③ 사회복지사는 ‘행동체계’가 아니라 ‘변화매개체계’이다.
④ 남편은 ‘클라이언트 체계’가 아니라 ‘표적체계’이다.
- ④
‘의무상충’이 아니라 ‘결과의 모호성’이 맞다.
- ①
선지분석
② ‘펠만(Pelman)의 문제해결모델’은 1957년, 즉 1950년대에 등장한 모델이다.
③ ‘전문주의적 접근(specialist approach)’이 아니라 ‘일반주의적 접근(generalist approach)’이 맞다.
④ 통합적 접근이란 전통적 방법의 일부 또는 전부를 통합한다는 의미이다. 즉 지식·기술·이론·모델의 통합을 의미한다.
- ②
‘직접적인’이 아니라 ‘간접적인’이 맞다.
- ②
‘박애사상(또는 인도주의)’은 인보관운동가들이 아닌 ‘조선조직협회 우애방문단원들의 이념’이었다.

18. ③

‘능력에 비례한 배분’이 아니라 ‘능력에 비례한 부담’이 맞으며, 참고로 사회복지정책은 ‘필요에 따른 배분’을 지향한다.

19. ①

‘산업사회 이전 공동사회(Gemeinschaft)가 산업사회 이후 이익사회(Gesellschaft)로 발전되어 왔다.’가 맞다.

20. ①

①은 ‘직접적 개입’이 아니라 ‘간접적 개입’에 해당하는 사례이다.

형법

[정답 채점하기]

1	2	3	4	5
③	①	②	④	①
6	7	8	9	10
④	②	④	④	③
11	12	13	14	15
④	①	①	④	①
16	17	18	19	20
①	④	②	③	③

1. ③

(○) 포클레인 기사인 피고인이 포클레인을 이용해 토사를 덤프트럭에 적재하는 작업을 하면서 작업범위 밖으로 토사 등이 떨어지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포클레인으로 퍼서 올린 토사가 부근의 자전거도로 떨어지게 하여 자전거를 타고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들이 떨어진 돌에 부딪혀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한 경우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대판 2021.11.11. 2021도11547).

선지분석

- ① (×)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주택 내부 주차장에 출입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는 외에 차량을 용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으므로 강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21.11.25. 2018도1346).
- ② (×)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그 직무와의 관련성 혹은 필요성에 기하여 해당 직무의 집행과 관련 있는 다른 공무원에게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전달한 경우에는, 관련 각 공무원의 지위 및 관계, 직무집행의 목적과 경위, 비밀의 내용과 전달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비밀을 전달받은 공무원이 이를 그 직무집행과 무관하게 제3자에게 누설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국가기능에 위험이 발생하리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행위가 비밀의 누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21.11.25. 2021도2486).
- ④ (×) 법률 위반 행위 중간에 일시적으로 판례에 따라 그 행위가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자신의 행

위가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21.11.25. 2021도10903).

2. ①

(○) 대판 2017.2.16. 2015도16014 전합

선지분석

- ② (×) 명확성의 요청에 반하는 것은 절대적 부정기형에 한하며 상대적 부정기형은 형기를 수형자의 개선의 진도에 따르게 하여 교정교육의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형벌의 개별화사상에 입각하여 널리 인정되고 있다(소년법 제60조).
- ③ (×) 청소년보호법의 변경은 청소년의 숙박행위까지 처벌대상으로 삼은 종전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데서 나온 반성적 조치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대판 2000.12.8. 2000도2626).
- ④ (×) 피고인이 의뢰인들에게 일정한 할인료를 공제한 금전을 교부하고 이와 상환하여 교부받은 상품권은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일정한 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권면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청구권이 화체된 유가증권의 일종인 점, 피고인과 의뢰인들 간의 상품권 할인 매입은 매매에 해당하고, 피고인과 의뢰인들 간의 관계는 피고인이 의뢰인들로부터 상품권 핀 번호를 넘겨받고 상품권 할인 매입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모두 종료되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의뢰인들로부터 상품권을 할인 매입하면서 그 대금으로 금전을 교부한 것은 대부의 개념요소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대부업법의 규율 대상이 되는 '금전의 대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19.9.26. 2018도768).

3. ②

- (×) 협박죄는 상대방이 해악의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라 봄이 상당하고, 협박죄의 미수범 처벌조항은 해악의 고지가 현실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나, 도달은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지각하지 못하였거나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등에 적용될 뿐이다(대판 2007.9.28. 2007도606 전합).

선지분석

- ① (○) 직무유기죄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작위 의무의 존재와 그에 대한 위반을 전제로 하고 있는 바,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었고 그 후에도 계속하여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위법한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가벌적 위법상태는 계속 존재하고 있다고 할 것이며 형법 제122조 후단은 이를 전체적으로 보아 1죄로 처벌하는 취지로 해석되므로 이를 즉시범이라고 할 수 없다(대판 1997.8.29. 97도675).
- ③ (○) 학대죄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가 있음과 동시에 범죄가 완성되는 상태범 또는 즉시범이라 할 것이고 비록 수신회에 걸쳐서 계속되는 일련의 폭행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중 친권자로서의 징계권의 범위에 속하여 위 위법성이 조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따로 떼어 무죄의 판결을 할 수 있다(대판 1986.7.8. 84도2922).
- ④ (○) 도주죄는 즉시범으로서 범인이 간수자의 실력적 지배를 이탈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기수가 되어 도주행위가 종료하는 것이고, 도주원조죄는 도주죄에 있어서의 범인의 도주행위를 야기시키거나 이를 용이하게 하는 등 그와 공범관계에 있는 행위를 독립한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이므로, 도주죄의 범인이 도주행위를 하여 기수에 이른 이후에 범인의 도피를 도와주는 행위는 범인도피죄에 해당할 수 있을 뿐 도주원조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대판 1991.10.11. 91도1656).

4. ④

- (×) 판례는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한다(대판 1984.10.10. 82도2595 전합). 양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형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선지분석

- ① (○) 대판 2018.8.1. 2015도10388
- ② (○) 대판 1983.3.22. 81도2545
- ③ (○)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금지위반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하여 그 자신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로 인하여 처벌되는 것이므로 영업주의 위 과실 책임을 묻는 경우 금지위반행위자인 종업원에게 구성요건상의 자격이 없다고 하더라도 영업주의 범죄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대판 1987.11.10. 87도1213).

5. ①

- (×) 부진정결과적 가중범도 기본범죄는 고의범이라야 하며, 중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범인 경우에는 물론이고 과실범인 경우에도 인정되는 개념이다.

선지분석

- ② (○) 형법 제258조 제1항
- ③ (○) 불을 놓은 집에서 빠져 나오려는 피해자들을 막아 소사케 한 행위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위 방화행위와 살인행위는 법률상 별개의 범의에 의하여 별개의 법익을 해하는 별개의 행위라고 할 것이니, 현주건 조물방화죄와 살인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대판 1983.1.18. 82도2341).
- ④ (○) 현행법 조문상 강도치사상(제337조, 제338조, 제342조), 해상강도치사상(제340조 제2항·제3항, 제342조), 인질치사상(제324조의3, 4, 5) 등에 대하여는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해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을 인정하자는 학설이 있지만 판례는 이를 부정한다.

6. ④

- (×) 형법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범죄로 보던 행위에 대하여 그 평가가 달라져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그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신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의 가중적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던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을 삭제하는 대신에 같은 구성요건을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 신설하면서 법정형을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보다 낮게 규정한 것은, 가중적 구성요건의 표지가 가지는 일반적인 위험성을 고려하더라도 개별 범죄의 범행경위, 구체적인 행위태양과 법익침해의 정도 등이 매우 다양함에도 일률적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한 종전의 형법규정이 과중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는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한다(대판 2016.1.28. 2015도17907).

선지분석

- ① (○) 대판 2000.2.11. 99도4794
- ② (○) 형법 제63조
- ③ (○) 형법 제260조 제3항

7. ②

선지분석

- ㄱ. (○) 골프시설의 운영자가 골프회원에게 불리하게 내용이 변경된 회칙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내용의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회원으로 대우하지 않겠다고 통지하는 것은 강요죄의 협박에 해당한다(대판 2003.9.26. 2003도763).
- ㄴ.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피고인 甲, 乙이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찰한 결과를 토대로 피해자에게 피해사고나 망상장애의 의심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해자를 응급이송차량에 강제로 태워 병원으로 데려가 입원시켰다면, 진단 과정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 최선의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신중하지 못했던 점이 일부 있었더라도 감금죄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형법상 감금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대판 2015.10.29. 2015도8429).
- ㄷ. (×) 법인은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대판 2010.7.15. 2010도1017).
- ㄹ. (○) 미성년자의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아버지가 미성년자의 양육을 외조부에게 맡겼으나 교통사고 배상금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자, 학교에서 귀가하는 미성년자를 아버지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차에 태우고 데려간 경우 미성년자학취죄가 성립한다(대판 2008.1.31. 2007도8011).

8. ④

- (×) 업무방해죄에서 '허위사실의 유포'란 객관적으로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사실을 유포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21.9.30. 2021도6634).

선지분석

- ① (○) 대판 2008.1.17. 2006도1721
- ② (○) 대판 2013.11.28. 2013도5117
- ③ (○) 제3자로 하여금 상대방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게 하는 등으로 상대방의 업무에 곤란을 야기하거나 그러한 위험이 초래되게 하였더라도, 행위자가 그 제3자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에 대하여 업무상의 지시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판 2021.7.8. 2021도3805).

9. ④

- (×) 주권포기각서는 주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처분문서로서 그 경제적 가치가 있어 재물성이 있다(대판 1996.9.10. 95도2747).

선지분석

- ① (○) 상습으로 단순절도를 범한 범인이 상습적인 절도범행의 수단으로 주간(낮)에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주간 주거침입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평가가 형법 제332조, 제329조의 구성요건적 평가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형법 제332조에 규정된 상습절도죄를 범한 범인이 범행의 수단으로 주간에 주거침입을 한 경우 주간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죄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대판 2015.10.15. 2015도8169).
- ② (○) 대판 1998.4.24. 97도3425
- ③ (○) 고속버스 운전사는 고속버스의 관수자로서 차내에 있는 승객의 물건을 점유하는 것이 아니고 승객이 잊고 내린 유실물을 교부받을 권능을 가질 뿐이므로 유실물을 현실적으로 발견하지 않는 한 이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할 수 없고, 그 사이에 다른 승객이 유실물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갔다면 절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한다(대판 1993.3.16. 92도3170).

10. ③

선지분석

- ㄱ. (×) 준강도죄의 주체는 절도범인으로서 단순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특수절도를 포함하고, 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이상 미수·기수를 불문한다(대판 2003.10.24. 2003도4417).
- ㄴ. (○) 대판 1985.5.14. 85도619
- ㄷ. (×) 폭행이 사회통념상 절도범행이 이미 완료된 이후에 행해진 경우 준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1999.2.26. 98도3321).
- ㄹ. (×) 주점 지하 창고에 있는 양주를 절취하려던 중 인기척이 나서 절취하려던 양주를 그대로 두고 나 오다가 주점 종업원에게 붙잡히자 종업원을 폭행하였다면, 준강도의 기수이다.

11. ④

- (×) 甲 주식회사 임원인 피고인들이 회사 직원들 및 그 가족들에게 수여할 목적으로 전문의약품인 타미플루 39,600정 등을 제약회사로부터 매수하여 취득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의약품을 양도하는 수여행위도 '판매'에 포함되므로 구 약사법 제44조 제1항 위반행위에 해당되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 아니다(대판 2011.10.13. 2011도6287).

선지분석

- ① (○) 주민들이 농기계 등으로 그 주변의 농경지나 임야에 통행하기 위해 이용하는 자신 소유의 도로에 깊이 1m 정도의 구덩이를 판 행위가 일반교통 방해죄에 해당하고 자구행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7.3.15. 2006도9418).
- ② (○) 타인의 의뢰를 받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부동산공시법)이 정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행하는 것은 회계서류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과는 관계가 없어 '회계에 관한 감정' 또는 '그에 부대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공인회계사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공시법이 정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업으로 행하는 것은 부동산공시법 제43조 제2호에 의하여 처벌되는 행위에 해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20조가 정한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15.11.27. 2014도191).
- ③ (○) 긴급피난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이 침해되는 법익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해야 한다. 생명과 생명이 충돌하는 문제에서는 긴급피난이 허용될 수 없다.

12. ①

(○) 대판 2015.2.12. 2014도12753

선지분석

- ② (x) 피고인이 평소 간질병 증세가 있었더라도 범행 당시에는 간질병이 발작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책임감면사유인 심신장애 내지는 심신미약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판 1983.10.11. 83도1897).
- ③ (x)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하에 행위자 대신에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이 평균인의 관점에서 그 기대가능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08.10.23. 2005도10101).
- ④ (x) 자기에게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가 결코 적극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 취지는 아니며,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다시 처벌되지 아니하므로 증언을 거부할 수 없는바, 이는 사실대로의 진술 즉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는 진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대판 2008.10.23. 2005도10101).

13. ①

(○) 대판 2019.3.28. 2018도16002 전합

선지분석

- ② (x) 미수는 실행의 착수가 전제조건이다.
- ③ (x)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예비의 단계에 그친 경우에는 이에 가공하는 행위가 예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범의 성립이 부정된다(대판 1976.5.25. 75도1549).
- ④ (x) 불능미수는 행위자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한다고 오인하였다는 측면에서 존재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사실의 착오와 다르다.

14. ④

- (x) 정범 자신이 구성요건을 직접 실현하여야 그 불법이 실현되는 범죄를 자수범이라고 한다. 직접 실행 행위를 하지 않은 자는 정범(공동정범, 간접정범)이 될 수 없으며, 협의의 공범이 될 수는 있다.

선지분석

- ① (○) 피고인이 축산업협동 공소 외 1 조합이 점유하는 타인 소유의 창고의 패널을 점유자인 공소 외 1 조합으로부터 명시적인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소유자인 위 타인으로 하여금 취거하게 한 경우 소유자를 도구로 이용한 절도죄의 간접정범이 성립될 수 있지만,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공소 외 1 조합의 의사에 반하여 위 창고의 패널을 뜯어간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대판 2006.9.28. 2006도2963).
- ② (○) 정범배후의 정범이론은 객체의 착오를 이용하는 경우(Dohna Fall), 예컨대 甲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 乙이 잠복해 있음을 알고 丙을 그곳으로 유인하여 丙을 살해당하게 하는 경우와, 조직적 권력구조를 통한 행위실현의 경우, 예컨대 KAL기를 폭파한 김현희와 그것을 지시한 대남공작원과 같이 명령에 절대복종할 수밖에 없는 관계가 있는 경우 등이 예이다. 이러한 이론은 제34조의 명문규정이 있는 이상 현행법 해석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 ③ (○) 공문서의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직무를 보좌하는 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 초안을 그 점을 모르는 상사에게 제출하여 결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된다(대판 1992.1.17. 91도2837).

15. ①

- (○)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판 2014.3.27. 2014도469).

선지분석

- ② (×)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전단). 따라서 판결이 확정된 선거범죄와 확정되지 아니한 다른 죄는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대판 2021.10.14. 2021도8719).
- ③ (×)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형법 제40조).
- ④ (×)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제37조).

16. ①

선지분석

- ㄱ. (×) 노상에 세워 놓은 자동차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자동차의 유리창을 통하여 그 내부를 손전등으로 비추어 본 것에 불과하다면 절취행위의 착수가 부정된다(대판 1985.4.23. 85도464).
- ㄴ. (×)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야간이 아닌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하여도 아직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라면 특수 절도죄의 실행에는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어서 그 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09.12.24. 2009도9667).
- ㄷ. (×) 주간에 피해자의 집 부엌문에 시정된 열쇠고리의 장식을 뜯는 행위만으로는 절도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판 1989.2.28. 88도1165).
- ㄹ. (○) 양수인에게 무허가건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는 양도인이 중도금 또는 잔금까지 수령한 상태에서 양수인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그 무허가 건물을 이중으로 양도하고 중도금까지 수령하였다면 이는 양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임무위배행위로서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더 나아가 제3자로부터 잔금을 수령하고 무허가건물을

인도하였다면 이는 배임죄의 기수에 해당한다(대판 2005.10.28. 2005도5713).

17. ④

- (×) 피고인이 타인과 공모하여 그를 상대로 의제자백 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진정한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 아니므로 그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편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판 1997. 12.23. 97도2430).

선지분석

- ① (○) 가압류는 강제집행의 보전방법에 불과한 것이어서 허위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가압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청구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채 가압류를 한 것만으로는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88.9.13. 88도55).
- ② (○) 진정한 임차권자가 아니면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그로써 소송사기의 실행행위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2012.5.24. 2010도12732).
- ③ (○) 피고인의 제소가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것이라면 그 판결은 그 내용에 따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여 상속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판 1986.10.28. 84도2386).

18. ②

- (×) '문서가 원본인지 여부'가 중요한 거래에서 문서의 사본을 진정한 원본인 것처럼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조작을 가함이 없이 문서의 원본을 그대로 컬러 복사기로 복사한 후 복사한 문서의 사본을 원본인 것처럼 행사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대판 2016.7.14. 2016도2081).

선지분석

- ① (○) 대판 2011.9.29. 2010도14587
- ③ (○) 대판 1977.7.12. 77도1736
- ④ (○) 대판 2015.11.27. 2014도13083

19. ③

- (×) 처음에 배임증재로 무상 대여할 당시에 정한 사용기간을 추가로 연장해 주는 등 새로운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할 만한 사정이 없다면, 이는 종전에 이미 제공한 이익을 나중에 와서 뇌물로 하겠다는 것에 불과할 뿐 새롭게 뇌물로 제공되는 이익이 없어 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5.10.15. 2015도6232).

선지분석

- ① (○)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히 의무위반행위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뇌물은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대판 1997.4.17. 96도3378).
- ② (○) 대판 2000.1.21. 99도4940
- ④ (○) 대판 1999.1.29. 98도3584

20. ③

- (○)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한다. 단,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형법 제49조).

선지분석

- ①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형법 제62조 제1항).
- ② (×) 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형법 제52조 제1항).
- ④ (×)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형법 제58조 제2항). 피고사건에 대하여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면소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동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정답 채점하기]

1	2	3	4	5
④	②	②	④	②, ④
6	7	8	9	10
③	②	②	①	①
11	12	13	14	15
④	①	③	③	③
16	17	18	19	20
②	③	②	②	④

1. ④
뇌물공여자들에게 뇌물공여의 의사가 있었다면, 이는 범의를 유발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위법한 함정수사라 볼 수 없다.

선지분석

- ③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대판 2008.10.23. 2008도7362 안산 노래방 사건).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한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2. ②
고소권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선지분석

- ① 고소는 서면, 구술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형식의 제한이 없다.
④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3. ②

선지분석

- ① 피의자신문은 임의수사로 보는 것이 통설적 견해이며, 피의자신문의 경우 피의자가 수사기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신문 중이라도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제기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얻어 할 수 있다.
④ 실질적으로 피의자신문이라면 진술거부권 고지하여야 한다.

4. ④

선지분석

- ① 체포당시의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② 검사 역시 긴급체포서 작성해야 한다.
③ 체포의 긴급성 및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긴급체포요건을 갖추었다 할 수 없다.

5. ②, ④

절도죄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상대적 친고죄로, 乙에 대한 고소는 乙에게만 영향을 미치며, 甲은 누나의 고소가 있기 전까지는 처벌받지 아니한다.

6. ③

기피신청으로 소송진행이 정지된 기간 및 공소장 변경으로 인하여 공판절차를 정지한 기간, 공소제기 전의 체포, 구인, 구금기간은 법원의 구금기간 산입에서 제외한다.

선지분석

- 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해서만 3차 갱신이 가능하며, 위 신청권자에서 검사는 제외됨을 주의하여야 한다.

7. ②

옳은 것은 ㄱ, ㄹ이다.

선지분석

- ㄴ.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이 허용되지 않는다.
ㄷ. 수사방해의 목적이 명백하다면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할 수 있다.

8. ②

보석으로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하지는 않으므로, 보석 취소 결정의 등본에 의하여 피고인을 재구금하면 된다.

9. ①

간호사는 진료목적으로 채혈된 혈액의 소지자, 소유자, 보관자 중 1인이 될 수 있으므로, 간호사로부터 임의제출을 받았다면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선지분석

- ② 별건압수에 해당하므로, 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압수·수색을 중지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④ 범행현장에 해당하므로,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10. ①

옳은 것은 ㄱ, ㄴ이다.

선지분석

- ㄴ. 지방검찰청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ㄹ. 재정신청에 의하여 공소제기가 된 경우 검사는 공소취소를 할 수 없다.

11. ④

선지분석

- ①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구속할 수 있다.
- ② 구속영장에 구인의 효력이 있으므로 별도로 구인영장을 발부받을 필요가 없다.
- ③ 48시간이 아닌 24시간이다.

12. ①

환송 전의 원심에 관여한 재판관이 환송 후의 원심에 관여한 경우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전심에 해당하지 않는다.

13. ③

소속 고등법원이 같은 경우에는 고등법원이, 소속 고등법원이 다른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상급법원으로서 토지관할 병합·심리신청사건이 관할법원이 된다.

14. ③

‘면소판결’이 아니라, 공소제기의 방식의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15. ③

불구속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판결 선고로 법정구속되는 경우에는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고로 ‘필요적 변호사건’이란 구속 피고인으로 공판이 진행되는 사건을 말한다.

16. ②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에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진술 및 충분히 숙고할 시간이 주어 져야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본다.

선지분석

- ① 국민참여재판 회부결정이 난 경우, 이후 공소장 변경으로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이 아니게 되었더라도 국민참여재판으로 계속 진행함이 원칙이다.

17. ③

참여의 기회가 보장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후 증거능력을 추인하면(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증거로 함에 동의) 증거능력을 부여받는다.

선지분석

- ② 필요적 공범관계(대항범 등)에 있는 공동피고인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증인으로 신문이 불가능하나, 필요적 공범관계인 경우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아니다.

18. ②

조서에 이의의 취지를 기재하면 족하고, 조사를 다시 진행할 필요는 없다.

선지분석

- ④ 영상녹화물은 공소사실을 입증할 본증으로 사용될 수 없다.

19. ②

소년의 연령을 오인하거나, 성년의 연령을 오인하여 정기형 또는 부정기형이 선고된 경우 이는 법령에 위반한 것으로 비상상고의 이유가 된다.

선지분석

- ④ 피고인이 원판결 선고 전에 이미 사망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공시기각 결정을 하지 않은 것은 비상상고의 이유가 되지 않으며, 만일 피고인이 원판결 선고 전 이미 사망하였고 이를 알고 있으나 간과하고 판결선고에 나아간 것이라면 비상상고의 이유가 된다.

20. ④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경우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한 것으로 족하지 않고, 물건의 소지자가 다른 사람이라면 물건 소지자에게 따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교육학

[정답 채점하기]

1	2	3	4	5
②	②	②	④	②
6	7	8	9	10
③	②	③	③	③
11	12	13	14	15
②	①	④	④	②
16	17	18	19	20
④	②	③	①	④

- ②
플라톤(Platon)의 교육사상은 철저한 비민주적이면서 계급주의적 경향을 지닌다. 즉 통치능력이 있는 계층, 철(金)의 본성을 가진 계층만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아 통치자가 되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이는 오늘날 교육의 기회균등 측면에서 볼 때 한계를 지닌다.
- ②
피아제(Piaget)와 콜버그(Kohlberg)는 인지발달론에 근거한 도덕성 발달이론을 제시하였다. 즉 도덕성 발달에서 중요한 요소가 도덕적 사고이다.
- ②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는 덕은 중용에 있으며 그것을 구별하게 하는 힘은 이성이지만 좋은 품성으로 그것을 실천하게 하는 것은 습관형성이라고 보았다.
- ④
롤즈(Rawles)가 주장한 정의론의 원리인 '평등한 자유의 원리'와 '차별의 원리'에 기초한 평등관은 보상적 평등관이다.
- ②
동화란 새로운 지각물이나 자극 사건을 이미 가지고 있던 스키마에 통합되도록 하는 인지과정이다. 그 예로는 철수가 교사의 강의를 자신의 이해 수준에 맞추어 이해한 것이 있다.

선지분석

- ① 영희가 교사의 강의를 듣자 약간의 지적 혼란을 겪게 된 것은 인지적 비평형이다.

③, ④ 진수가 교사의 강의를 듣고 자신의 기존 생각을 바꾸어 이해하였거나, 이수 교사가 새로운 학생 집단을 만나 그의 과거 강의방식을 바꾼 것은 조절이다.

- ③
비지시적 상담을 인본주의적 상담이라고도 하며, 치료의 초점을 문제 자체보다는 인간에게 두며, 지적인 면보다는 정서적인 면을 중시한다. 비지시적 상담에서는 인간의 의지와 통찰력을 인정하고, 면담과정을 통해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준다.
- ②
지적 기능이란 여러 가지 기호나 상징(숫자, 문자, 단어 등)을 사용하여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능력을 말한다.
- ③
중핵형은 중핵과정과 주변과정이 동심원적으로 조직된 경험중심 교육과정의 통합 유형이다. 중핵형은 욕구중핵, 교과중핵, 생활문제중핵 등의 형태 등이 있다.
- ③
인간관계론은 조직 구성원의 필요, 협동 및 사기 등을 중요시하는 관리방법이다. 인간관계론은 조직의 합리적 운영이나 의사결정을 소홀히 해서 조직의 능력을 저하시키거나 조직의 구조적인 측면과 생산성 제고의 측면 등을 경시하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 ③
학교교육에 대한 보울즈와 진티스(Bowles & Gintis)의 관점은 경제적 재생산 이론으로 학교는 학생들을 불평등한 직업구조에 알맞은 능력과 태도를 가진 순치된 노동자를 양성하는 곳이라는 대응이론적 관점이다.

선지분석

- ① 학교에서의 사회화가 사회질서유지, 사회통합, 안정의 유지에 기여한다는 것은 기능론이다.
- ② 노동자 계층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정신노동의 가치를 거부하는 것은 저항이론이다.
- ④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과정에는 지배 이데올로기, 성역할 불평등을 조장하는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고 보는 것은 교육과정 사회학이다.

11. ②

선지분석

- ①, ③ 명제의 파지, 명제의 재생과 전이는 종속변인이다.
- ④ 유의미 아이디어의 집합체는 독립변인이다.

12. ①

교사의 교수법 개선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형성평가이다.

13. ④

평생교육의 대분류인 6대 영역 가운데 인문교양교육의 18진 분류영역에는 건강 심성 프로그램, 기능적 소양 프로그램, 인문학적 교양 프로그램 등이다. 문화예술 향상 프로그램은 문화예술 교육에 해당한다.

14. ④

그리스적 자유교육이란 정신을 자유롭게 하는 교육 혹은 진리를 위한 지식을 의미한다. 이는 교육의 실제적 가치 실현이 아니라 내재적 가치를 강조한 교육정신이었다.

15. ②

변산도를 가장 빨리 알고 싶을 때는 범위(최고정수-최저점수+1)로 계산한다.

16. ④

교육활동의 전문성 혹은 특수성은 효과의 장기성, 성과의 비가시성, 평가의 모호성, 높은 공공성, 비긴급성 등이다.

17. ②

국립·공립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의무교육 대상자의 교육을 위탁받은 사립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의무교육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받을 수 없다.

18. ③

단기기억은 감각기관을 통해 들어온 정보가 선택적 주의집중을 통해 잠시 동안 기억되는 유형이다. 단기기억에서의 정보의 양은 7 ± 2 로 제한적이고 지속시간이 20~30초로 일시적이다.

19. ①

교과중심 교육과정은 전통적인 형식도야 이론을 근거로 하였다. 경험중심 교육과정은 동일요소설, 학문중심 교육과정은 일반화설을 강조한다.

20. ④

최한기는 인간의 모든 인식은 경험을 통해 성립된다는 경험론에 기초해서 아동기의 견문(見聞)과 염습(染習)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선지분석

- ① 과거제를 개혁하고, 공거제와 병행할 것을 주장한 사람은 성호 이익이다.
- ② 기존 학제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4단계 학제론을 제시한 사람은 반계 유형원이다.
- ③ 전국의 행정구역을 정비해서 각 면(面)에 '재(齎)'라는 학교를 두도록 한 사람은 홍대용이다.

교정학개론

[정답 채점하기]

1	2	3	4	5
③	①	①	④	④
6	7	8	9	10
①	③	④	③	④
11	12	13	14	15
③	④	④	④	④
16	17	18	19	20
④	③	③	④	③

1. ③

잘못된 부정(false negative)이란 ‘차후 범죄가 없을 것 이라고 예측하였지만 실제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로서, ‘사회와 구성원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 지문은 잘 못된 긍정(false positive)에 대한 설명이다.

선지분석

- ① 집합적 무능력화는 모든 강력범죄자를 장기간 구금 하여 '교정비용의 증가' 및 과밀수용의 문제를 야기 하며, 그 대안으로 선별적 무능력화에 대한 주장이 제기된다.
- ② 중·누범자들이 구금된 빈자리를 다른 범죄자들이 대신하는 경우에는 범죄감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 다(범죄자 대체효과를 야기)는 단점이 지적된다.
- ④ 소수의 중·누범자들이 대부분의 강력범죄를 저지른 다는 전제에서 이들을 장기간 구금하여 범죄의 감소 를 추구하는 방안이다.

2. ①

‘수용자의 심리적 안정이나 교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용자 번호와 성명을 함께 부르거나 성명만을 부를 수 있다(「교도관직무규칙」 제12조 단서).

제12조 【수용자에 대한 호칭】 수용자를 부를 때에는 수 용자 번호를 사용한다. 다만, 수용자의 심리적 안정이 나 교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용자 번호와 성명 을 함께 부르거나 성명만을 부를 수 있다.

선지분석

- ② 「교도관직무규칙」 제8조

③ 「교도관직무규칙」 제41조 제3항

제41조 【접견 참여 등】 ③ 수용자의 접견에 관한 기록은 수용자의 처우나 그 밖의 공무수행상 필요 하여 상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 교도관이 아닌 교도관은 열람이나 복사 등을 해서 는 아니 된다.

④ 「교도관직무규칙」 제14조 제1항

제14조 【수용자의 손도장 증명】 ① 수용자가 작성 한 문서로서 해당 수용자의 날인이 필요한 것은 오 른손 엄지손가락으로 손도장을 찍게 한다. 다만, 수 용자가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손도장을 찍을 수 없 는 경우에는 다른 손가락으로 손도장을 찍게 하고, 그 손도장 옆에 어느 손가락인지를 기록하게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문서 작성 시 참여한 교도관 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해당 수용자의 손도장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3. ①

‘교정보부장’은 정보공개청구의 상대방이 아니다(법 제 117조의2 제1항 참조).

법 제117조의2 【정보공개청구】 ① 수용자는 「공공기관 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무부장관, 지방교정 청장 또는 소장에게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선지분석

② 법 제117조의2 제2항

법 제117조의2 【정보공개청구】 ② 현재의 수용기간 동안 법무부장관, 지방교정청장 또는 소장에게 제1 항에 따른 정보공개청구를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청구를 취하하거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 이 2회 이상 있는 수용자가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경우에 법무부장관, 지방교정청장 또는 소 장은 그 수용자에게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들 것 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미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법 제117조의2 제3항

법 제117조의2 【정보공개청구】 ③ 제2항에 따라 정 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들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미리 납부하여야 하는 수용자가 비용을 납부하지 아 니한 경우 법무부장관, 지방교정청장 또는 소장은 그 비용을 납부할 때까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 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을 유 예할 수 있다.

④ 법 제117조의2 제4항

법 제117조의2【정보공개청구】 ④ 제2항에 따른 예상비용의 산정방법, 납부방법, 납부기간, 그 밖에 비용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④

검사는 형사사건을 수사하고 처리할 때 형사조정 결과를 고려할 수 있다. 다만,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5조 제4항).

5. ④

- ㉠ 법 제5조의2 제2항 제1호
- ㉡ 법 제5조의2 제2항 제5호
- ㉢ 법 제5조의2 제2항 제8호
- ㉣ 법 제5조의2 제2항 제9호

법 제5조의2【기본계획의 수립】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 방향
2. 인구·범죄의 증감 및 수사 또는 형 집행의 동향 등 교정시설의 수요 증감에 관한 사항
3. 교정시설의 수용 실태 및 적정한 규모의 교정시설 유지 방안
4. 수용자에 대한 처우 및 교정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적절한 교도관 인력 확충 방안
5. 교도작업과 직업훈련의 현황,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한 작업설비 및 프로그램의 확충 방안
6. 수형자의 교육·교화 및 사회적응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추진방향
7. 수용자 인권보호 실태와 인권 증진 방안
8. 교정사고의 발생 유형 및 방지에 필요한 사항
9.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①

ㄱ, ㄴ, ㄷ. 차별적 접촉이론에서 서덜랜드(Sutherland)는 범죄학습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9가지 명제).

정리 서덜랜드(Sutherland)의 범죄학습이 이루어지는 과정(9가지 명제)

- ㉠ 범죄행동은 학습된다.
- ㉡ 범죄행동은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 학습된다.
- ㉢ 범죄학습의 주요 부분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개인집단 안에서 일어난다.
- ㉣ 범죄학습 내용은 범죄기술 외에 범죄동기·충동·합리화 방법·태도 등을 포함한다.
- ㉤ 범죄동기·충동의 구체적 방향은 법규범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정의로부터 정해진다.
- ㉥ 어떤 사람이 범죄자가 되는 것은 법률 위반에 대한 긍정적 정의가 부정적 정의를 압도하기 때문이다(차별적 접촉).
- ㉦ 차별적 접촉은 빈도·기간·순위·강도에 따라 달라진다.
- ㉧ 범죄자와 접촉을 통해 범죄를 배우는 과정은 다른 모든 행위의 학습과정과 같다.
- ㉨ 범죄행동은 사회의 일반적 욕구와 가치관의 표현이지만 그것만으로 범죄를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선지분석

ㄹ. '범죄행동은 사회의 일반적 욕구와 가치관의 표현이지만 그것만으로 범죄를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금전적 욕구나 좌절 등 범죄의 욕구와 가치관이 범죄행위와 비범죄행위를 구별하는 변수가 될 수 없다.

7. ③

- ㉠, ㉡, ㉢ 영 제24조

영 제24조【호송 시 분리】 수용자를 이송이나 출정(出廷), 그 밖의 사유로 호송하는 경우에는 수형자는 미결수용자와, 여성수용자는 남성수용자와, 19세 미만의 수용자는 19세 이상의 수용자와 각각 호송 차량의 좌석을 분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로 접촉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선지분석

㉣ 외국인수용자와 내국인수용자는 호송 시 분리하여야 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8. ④

접견 중인 수용자 또는 그 상대방이 수용자의 처우 또는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거짓사실을 유포하는 때에 해당하면 접견을 중지할 수 있다(법 제42조 제4호).

법 제42조【접견의 중지 등】 교도관은 접견 중인 수용자 또는 그 상대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접견을 중지할 수 있다.

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하려고 하는 때
2. 제92조의 금지물품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으려고 하는 때
3.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4. 수용자의 처우 또는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거짓사실을 유포하는 때
5.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6.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9. ③

밀러(W. Miller)의 하위계층문화이론(하층계급문화이론)에서는 하층계급의 범죄 및 일탈에 대해 중류계층의 규범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기가 소속된 해당 문화에 충실한 행위일 뿐이라고 본다. 지문의 내용은 코헨의 비행하위문화이론의 주장이다.

선지분석

- ① 낙인이론에 의하면 범죄는 일정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기관의 낙인에 의해 선별적으로 만들어진다고 본다(귀속과 낙인의 산물).
- ② 허쉬(Hirschi)의 사회통제이론(사회유대이론)은 “우리는 모두 동물이고 따라서 범죄성을 본질적으로 지니고 있기 때문에 비행의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것은 필요 없다.”라고 보아, ‘왜 범죄를 저지르는가’가 아니라 ‘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가’에 관심을 두며, 개인적 통제보다 사회적 통제를 강조하여 사회유대의 약화를 비행의 원인으로 보아 사회유대의 요소로서 애착, 전념, 참여, 신념을 들고 그 중 애착을 가장 중요시한다.
- ④ 사회해체이론은 범죄의 발생을 전통적 사회조직의 붕괴로 인한 규범의식의 변화, 사회통제력의 약화 및 반사회적 행위의 보편화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본다.

10. ④

적절한 조치를 ‘하야야 한다’(법 제52조 제1항).

법 제52조【임산부인 수용자의 처우】 ① 소장은 수용자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사산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모성보호 및 건강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인 검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야야 한다.

선지분석

① 법 제50조 제2항

법 제50조【여성수용자의 처우】 ② 소장은 여성수용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나이·건강 등을 고려하여 부인과질환에 관한 검사를 포함시켜야 한다.

② 법 제41조 제3항 제1호

법 제41조【접견】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하게 할 수 있다.
1. 수용자가 미성년자인 자녀와 접견하는 경우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법 제53조 제1항

법 제53조【유아의 양육】 ① 여성수용자는 자신이 출산한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장은 다음 각 호(→ 양육불허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생후 18개월에 이르기까지 허가하야야 한다.

11. ③

「소년법」 제63조

선지분석

- ①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소년법」 제59조). 이 규정은 행위 시에 18세 미만이었으나 과형 당시에 성인이 된 때에도 적용한다.
- ②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상대적 부정기형)(「소년법」 제60조 제1항).
- ④ 징역 또는 금고로 선고받은 소년이 가석방된 후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 전에 집행을 받은 기간과 같은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한다. 다만, 제59조의 형기(→ 15년의 유기징역) 또는 제60조 제1항에 따른 장기의 기간(→ 부정기형의 장기)이 먼저 지난 경우에는 그 때에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한다(「소년법」 제66조).

12. ④

규칙 제96조 제1항 참조

규칙 제96조 【외부 직업훈련】 ① 소장은 수형자가 개방처우급 또는 완화경비처우급으로서 직업능력 향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교정시설 외부의 공공기관 또는 기업체 등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선지분석

- ① 개방처우급 수형자에 대해서만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 외의 적당한 곳에서 접견을 실시할 수 있음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완화·일반·중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도 가능하다(규칙 제88조 단서 참조).

규칙 제88조 【접견 장소】 소장은 개방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 외의 적당한 곳에서 접견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밖의 수형자(→ 완화·일반·중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도 이를 허용할 수 있다.

- ② 봉사원 선정의 대상자는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이며, 선정에 있어 분류처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요한다(규칙 제85조 제1항·제4항 참조).

규칙 제85조 【봉사원 선정】 ① 소장은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로서 교정성적, 나이, 인성 등을 고려하여 다른 수형자의 모범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봉사원으로 선정하여 담당교도관의 사무처리와 그 밖의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④ 소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봉사원 선정, 기간연장 및 선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처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③ 사회견학, 사회봉사 등의 사회적 처우는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 허가할 수 있음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처우상 특히 필요하면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도 허가할 수 있다(규칙 제92조 제1항 참조).

규칙 제92조 【사회적 처우】 ① 소장은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 교정시설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도 이를 허가할 수 있다.

1. 사회견학
2. 사회봉사
3. 자신이 신봉하는 종교행사 참석
4. 연극, 영화, 그 밖의 문화공연 관람

13. ④

- ㄱ. 형벌은 위하작용에 의해 일반 국민의 범죄를 예방하고(일반예방, 초범예방), 범죄인의 개선효과(특별예방, 재범예방)도 거둘 수 있다.
- ㄴ. 그룹워크(Group Work)란 반사회적 성향이 있는 사람을 별도로 분류하여 교육을 시키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를 함으로써 사회에 긍정적 태도를 갖도록 하는 것으로서 초범예방대책에 속한다.
- ㄷ. 소셜워크(Social Work, 전문기술적용 개선법)란 대상 범죄자의 능력을 발견하고 발전시켜서 사회적 자원을 활용하여 범죄자 스스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에 대한 적응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으로서 재범예방대책에 속한다.
- ㄹ. 지역사회회 조직화는 초범예방을 위한 대책이지만 재범예방대책으로도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 ㅁ. 임상적 개선법이란 범죄인에게 존재하는 생물학적·정신의학적·심리학적 이상·결함을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으로서 재범예방대책에 속한다.
- ㅂ. 매스컴은 대중에게 범죄문제를 자세히 알리며 범죄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교육함으로써 초범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

14. ④

법 제76조 제1항 참조

법 제76조 【위로금·조위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① 제74조의 위로금 또는 조위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다른 사람 또는 법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 또는 법인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선지분석

- ① 소장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영 제89조 참조).

영 제89조 【작업의 종류】 소장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형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의 종류를 정한다.

- ② 면제한다(법 제72조 제1항 참조).

법 제72조 【작업의 면제】 ① 소장은 수형자의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하면 2일간, 부모 또는 배우자의 제삿날에는 1일간 해당 수형자의 작업을 면제한다. 다만, 수형자가 작업을 계속하기를 원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③ 접견·전화통화·교육·공동행사 참가 등의 처우를 제한할 수 있다(법 제70조 참조).

법 제70조【집중근로에 따른 처우】 ① 소장은 수형자의 신청에 따라 제68조의 작업(→ 외부통근작업), 제69조 제2항의 훈련(→ 외부직업훈련), 그 밖에 집중적인 근로가 필요한 작업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접견·전화통화·교육·공동행사 참가 등의 처우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접견 또는 전화통화를 제한한 때에는 휴일이나 그 밖에 해당 수용자의 작업이 없는 날에 접견 또는 전화통화를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15. ④

일수벌금제도란 범행의 경중에 따라 일수를 먼저 정하고 일수정액은 피고인의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하는 개선된 벌금형제도이다. 일수벌금제도는 행위자의 경제상태 내지 지불능력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개별화함으로써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16. ④

시신을 검사한 후 '5분'이 지나지 아니하면 교수형에 사용한 줄을 풀지 못한다(영 제111조).

영 제111조【사형집행 후의 검사】 소장은 사형을 집행하였을 경우에는 시신을 검사한 후 5분이 지나지 아니하면 교수형에 사용한 줄을 풀지 못한다.

선지분석

- ① 법 제89조 제2항

법 제89조【사형확정자의 수용】 ② 사형확정자가 수용된 거실은 참관할 수 없다.

- ② 규칙 제150조 제3항

규칙 제150조【구분수용 등】 ③ 소장은 사형확정자의 자살·도주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형확정자와 미결수용자를 혼거수용할 수 있고, 사형확정자의 교육·교화프로그램, 작업 등의 적절한 처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형확정자와 수형자를 혼거수용할 수 있다.

- ③ 영 제109조

영 제109조【접견 횟수】 사형확정자의 접견 횟수는 매월 4회로 한다.

17. ③

- ㄱ.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제2호

제42조【유치】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신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39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구인한 보호관찰 대상자를 수용기관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1. 제47조에 따른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벌금형을 제외한다)의 선고유예의 실효(失効) 및 집행유예의 취소 청구의 신청
2. 제48조에 따른 가석방 및 임시퇴원의 취소 신청
3. 제49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변경 신청

- 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항

제42조【유치】 ② 제1항에 따른 유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보호관찰 대상자가 구인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유치 허가를 청구하여야 한다.

- ㄷ.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5조【유치기간의 형기 산입】 제42조에 따라 유치된 사람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된 경우 또는 가석방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유치기간을 형기에 산입한다.

선지분석

- ㄴ. 가석방 및 임시퇴원의 취소 신청을 위한 유치에 있어서는 심사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하면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유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제3항).

제43조【유치기간】 ① 제42조에 따른 유치의 기간은 제39조제1항 또는 제40조제1항에 따라 구인한 날부터 20일로 한다.

② 법원은 제42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신청(→ 선고유예의 실효 및 집행유예의 취소 청구의 신청, 보호처분의 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에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심급마다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유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4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신청(→ 가석방 및 임시퇴원의 취소 신청)이 있는 경우에 심사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하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 판사의 허가를 받아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유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8. ③

- ㄱ. 수용자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법 제97조 제1항 제3호), 수용자 또는 수용자 외의 사람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법 제100조 제1항 제5호, 동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한다.
- ㄴ. 수용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법 제100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
- ㄷ. 수용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법 제100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한다.

선지분석

ㄷ. 법 제101조 제1항 제4호

법 제101조 【무기의 사용】 ① 교도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수용자에 대하여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1. 수용자가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고 하여 그 사태가 위급한 때
2. 수용자가 폭행 또는 협박에 사용할 위험물을 지니고 있어 교도관이 버릴 것을 명령하였음에도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
3. 수용자가 폭동을 일으키거나 일으키려고 하여 신속하게 제지하지 아니하면 그 확산을 방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4. 도주하는 수용자에게 교도관이 정지할 것을 명령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도주하는 때
5. 수용자가 교도관의 무기를 탈취하거나 탈취하려고 하는 때
6. 그 밖에 사람의 생명·신체 및 설비에 대한 중대하고도 뚜렷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무기의 사용을 피할 수 없는 때

19. ④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제9조 【부착명령의 판결 등】 ② 여러 개의 특정범죄에 대하여 동시에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에는 법정형이 가장 중한 죄의 부착기간 상한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의 부착기간의 상한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하나의 행위가 여러 특정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의 부착기간을 부착기간으로 한다.

선지분석

- ① ‘7일’ 이상의 국내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제14조 【피부착자의 의무】 ③ 피부착자는 주거를 이전하거나 7일 이상의 국내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하한’을 2배로 한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

제9조 【부착명령의 판결 등】 ① 법원은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생략)에 따른 기간의 범위 내에서 부착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부착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기간 하한을 다음 각 호에 따른 부착기간 하한의 2배로 한다.

1. 법정형의 상한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특정범죄: 10년 이상 30년 이하
2. 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특정범죄(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범죄는 제외한다): 3년 이상 20년 이하
3. 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이 3년 미만의 유기징역인 특정범죄(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범죄는 제외한다): 1년 이상 10년 이하

- ③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면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5조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부착명령”이라 한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20. ③

다시 징벌대상행위를 하여 '징벌이 결정되면' 그 유예한 징벌을 집행한다(법 제114조 제2항).

법 제114조 【징벌집행의 유예】 ② 소장은 징벌집행의 유예기간 중에 있는 수용자가 다시 제107조의 징벌대상행위를 하여 징벌이 결정되면 그 유예한 징벌을 집행한다.

선지분석

① 법 제115조 제1항

② 규칙 제234조 제1항 1호 라목 및 4호

규칙 제234조 【징벌의 실효】 ① 법 제115조 제1항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15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징벌 중 금치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
 - 가. 21일 이상 30일 이하의 금지: 2년 6개월
 - 나. 16일 이상 20일 이하의 금지: 2년
 - 다.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금지: 1년 6개월
 - 라. 9일 이하의 금지: 1년
4. 제215조 제4호에 해당하는 금지 외의 징벌: 1년

④ 규칙 제230조 제1항

규칙 제230조 【징벌의 집행순서】 ① 금지와 그 밖의 징벌을 집행할 경우에는 금치를 우선하여 집행한다. 다만, 작업장려금의 삭감과 경고는 금지와 동시에 집행할 수 있다.

노동법

[정답 채점하기]

1	2	3	4	5
②	③	③	④	①
6	7	8	9	10
③	②	①	②	④
11	12	13	14	15
④	②	③	③	②
16	17	18	19	20
①	④	④	②	④

1. ②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서 행위 하는 자’는 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는 근로자 지위를 가지고 있으나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사용자의 지위를 갖게 된다. 이런 점에서 사용자의 개념은 상대적이다.

선지분석

- 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근로자 개념은 정의규정과 입법목적 등 개념이 다르다.
③ 근로기준법 제 2조 제1항 제2호
④ 임원은 고용관계가 아닌 위임관계로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나, 예외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는 등 일정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될 수 있다(대판 2003.9.26, 2002다64681).

2. ③
근로시간(제50조)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 나머지 문항은 모두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3. ③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절대적 해고금지기간)은 시용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사용자는 시용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휴업기간 중에 시용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본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없다(대판 2021.4.29, 2018두43958).

선지분석

- ① 대판 1993.9.24, 93누4199
②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징계에 대한 절차적 규정이 있는 경우 이러한 절차적 제한규정에 위반하여 징계하는 것은 그 정당성이 부정된다.
④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더라도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18.9.13, 2017다16778). 즉 해고예고수당은 부당이득이 아니어서 근로자는 반환할 필요가 없다.

4. ④

선지분석

- ①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최초로 해고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5. 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긴급이행명령’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와 관련한 간접강제 내용이다.

선지분석

- ② 근로기준법 제30조 제4항 신설(2021.11.19. 시행)
③ 노동위원회는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부당해고 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④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1조

6. ③

근로자가 그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임금 직접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그 결과 비록 양수인이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사용자에게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해석해야 한다(대판 1988.12.13, 87다카2803).

선지분석

- ①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3조).
②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수당, 상여금의 경우 매월 1회 이상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서 제외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

- ④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훈인, 사망 등)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5조).

7. ②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 주에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3개월 이내 및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일 12시간, 특정 주에 52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 51조 및 제51조의 2).

선지분석

- ①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일정기간을 평균한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특정한 주나 특정한 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③④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임부에게 적용이 가능하지만 연소자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임부, 연소자 모두에게 적용이 불가하다.

8. ①

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

선지분석

- ② 근로기준법 제70조 제1항
- ③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69조).
- ④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제3호: 감시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승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②

- ①② 사용자는 서면으로 촉구해야 하고, 1년 미만 근속한 근로자도 사용촉진대상이 된다(제61조 제2항 신설).

선지분석

- ③ 사용촉진제도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어도 된다.
- ④ 사용촉진조치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청구권이 소멸한다(근로기준법 제61조).

10. ④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 그 변경으로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변경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되어 종전 취업규칙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 되지만, 변경 후에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근로관계를 갖게 된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당연히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대판 1992.12.22, 91다45165).

선지분석

- ① 취업규칙의 일부를 이루는 급여규정의 변경이 일부의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의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경우 그러한 변경에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요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근로자 전체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또 이러한 경우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전체적으로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려우며, 같은 개정에 의하여 근로자 상호간의 이, 불리에 따른 이익이 충돌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개정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취급하여 근로자들 전체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②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평화를 도모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노동조합과 그 제도의 취지가 다르므로 비록 회사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그 협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들이 노사협의회를 구성하는 근로자위원들을 선출함에 있어 그들에게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함에 있어서 근로자들을 대신하여 동의를 할 권한까지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근로자위원들이 퇴직금 규정의 개정에 동의를 함에 있어서 사전에 그들이 대표하는 각 부서별로 근로자들의 의견을 집약 및 취합하여 그들의 의사표시를 대리하여 동의권을 행사하였고도 볼 만한 자료도 없다면, 근로자 위원들의 동의를 얻은 것을 근로자들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것과 동일시 할 수 없다(대판 1994.6.24, 92다28556).
- ③ 근로자집단의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동의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없다(대판 1977.7.26, 77다355). 한편, 근로자 집단의 동의가 있는 한 반대한 개별 근로자에게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효력은 있다.

11. ④

제76조의3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2항, 제4항, 제5항, 제7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근로기준법 제116조 2항)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이다. 한편, 사용자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근로기준법 제116조 제1항). 직장 내 괴롭힘 위반과 관련된 과태료 조항이 신설되었음에 유의할 것.

12. ②

이 법이나 그 밖의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임검, 서류의 제출, 심문 등의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한다. 다만,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수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기준법 제105조).

선지분석

- ① 근로기준법 제101조 제1항
- ③ 근로감독관의 권한은 임검, 심문, 검진(의사), 기타 사법경찰관의 직무이다.
- ④ 근로기준법 제103조

13. ③

근로계약 상대방인 사용자가 아니라도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등으로 법 제81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행위를 하였다면, 그 시정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사용자에게 해당한다(대판 2010.3. 25, 2007두8881).

선지분석

- ① 2021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 개정 시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를 삭제하여(2021.7.6. 시행) 이제 해고자 등 취업관계 없는 자도 기업별 노조가입이 허용된다.

14. ③

판례는 근로시간 면제자의 급여를 성질상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노조 전임자의 급여에 대하여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선지분석

- 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 제24조의2 제1항
- ②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 제24조의2 제5항
- ④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 제24조의2 제2항

15. ②

6개월이 아니라 3개월 이내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 제29조의4 제2항).

선지분석

- 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 제29조의4 제1항
- ③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벌칙 규정은 없다.
- ④ 대판 2018.8.30, 2017다218642

16. ①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 폐쇄를 할 수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 제46호 제1항). 직장폐쇄는 정당성 요건으로서의 대항성이 요구된다.

선지분석

- ② 대판 2016.5.24, 2012다85335
- ③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 제44조 제1항
- ④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 제41조 제1항

17. ④

조정안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가 제시될 때까지는 관계 당사자는 당해 조정안의 해석 또는 이행에 관하여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 제60조 제5항).

선지분석

- 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 제53조 제1항
- ②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 제77조
- ③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 제57조 제1항

18. ④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 제86조

선지분석

- 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 제82조 제1항), 근로자 및 노동조합 모두 독자적으로 구제신청이 가능하다.
- ② 3월 이내에 해야 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 제82조 제2항).
- ③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 제85조 제1항).

19. ②

②는 적용제외 대상자이며, ①은 감액적용 대상자이다(단순노무업무 제외).

20. ④

재심의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선지분석

- ①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각 9명씩 구성한다(최저임금법 제14조 제1항).

관세법

[정답 채점하기]

1	2	3	4	5
④	③	①	②	①
6	7	8	9	10
③	④	③	①	④
11	12	13	14	15
④	④	②	④	②
16	17	18	19	20
③	①	②	③	④

1. ④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 외국의 영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이를 원료로 하여 우리나라 선박에서 제조하거나 가공한 것을 포함한다)이 수입될 때에는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법 제93조 제4호).

2. ③
법 제46조(관세환급금의 환급) 제1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 결, 3, 환'이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가산세 또는 강제징수비의 과오납금 또는 이 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의 환급을 청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관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3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확인한 관세환급금은 납세의무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아니하더라도 환급하여야 한다.

3. ①
화물관리인은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

선지분석

- ② 법 제178조(반입정지 등과 특허의 취소) 제3항에 대한 과징금 부과 대상이다.
③ 법 제224조(보세운송업자등의 행정제재) 제2항에 대한 과징금 부과 대상이다.
④ 법 제327조의2(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의 지정 등) 제5항에 대한 과징금 부과 대상이다.

4. ②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월별납부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관세법 시행령 제1조의5(월별납부)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월별납부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월별납부의 대상으로 납세신고된 세액에 대해서는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고지해야 한다.

1. 관세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월별납부를 승인받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청장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3. 사업의 폐업, 경영상의 중대한 위기, 파산선고 및 법인의 해산 등의 사유로 월별납부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5. ①

관세부과가 '유예된 때'는 납부의무가 소멸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관세법 제20조(납부의무의 소멸) 관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납부하여야 하는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소멸한다.

1. 관세를 납부하거나 관세에 충당한 때
2. 관세부과가 취소된 때
3. 제21조에 따라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4. 제22조에 따라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6. ③

과다환급 또는 부정환급 등의 사유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환급한 날의 다음날'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영 제6조 제4호). 이것은 환급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관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과 관련된 설명이다.

선지분석

- ① 영 제7조 제2항 제3호에 대한 옳은 내용이다.
② 영 제7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옳은 내용이다.
④ 영 제7조 제2항 제3의3호에 대한 옳은 내용이다.

7. ④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 전의 잠정조치에 의하여 제공되는 담보는 ‘법 제2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잠정덤핑방지관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어야 한다(영 제66조 제4항).

관세법 제24조(담보의 종류 등) ① 이 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전
2. 국채 또는 지방채
3.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4. 납세보증보험증권
7.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8. ③

관세법 시행령 제15조(가격신고)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1. 같은 물품을 같은 조건으로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2. 수입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 외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할 금액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과세가결정에 곤란이 없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③ 세관장은 가격신고를 하려는 자가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가격신고를 일정기간 일괄하여 신고하게 할 수 있다.

9. ①

세관공무원이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의 경우로 한정한다.

관세법 제116조(비밀유지) ①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이 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관세의 부과·징수 또는 통관을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도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국가기관이 관세에 관한 쟁송이나 관세법에 대한 소추(訴追)를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세관공무원 상호간에 관세를 부과·징수, 통관 또는 질문·검사하는 데에 필요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10. ④

‘미, 벌, 통’은 운영인의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만,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및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의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관세법 제327조의2(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의 지정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을 수 없다.

1. 제175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제175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재직하는 법인

제175조(운영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허보세구역에 설치·운영할 수 없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같은 호 각 목의 사유가 발생한 해당 특허보세구역을 제외한 기존의 다른 특허를 받은 특허보세구역에 한정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11. ④

수입물품이 매매계약상의 하자보수보증 기간(수입신고 수리 후 1년으로 한정한다) 중에 하자가 발견되거나 고장이 발생하여 외국의 매도인 부담으로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되었다가 다시 수입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해당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

관세법 시행령 제119조(해외입가공물품에 대한 관세 경감액) 법 제101조 제1항에 따라 경감하는 관세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의 물품: 가공·수리물품의 수출신고가격에 해당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 다만, 수입물품이 매매계약상의 하자보수보증 기간(수입신고수리 후 1년으로 한정한다) 중에 하자가 발견되거나 고장이 발생하여 외국의 매도인 부담으로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해당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가. 수출물품의 수출신고가격

나. 수출물품의 양륙항까지의 운임·보험료

다. 가공 또는 수리 후 물품의 선적항에서 국내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라. 가공 또는 수리의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

12. ④

세관장은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을 받은 자가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세관감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법 제164조 제6항).

선지분석

- ① 법 제164조(보세구역의 자율관리) 제2항에 대한 옳은 내용이다.
- ② 법 제164조(보세구역의 자율관리) 제3항에 대한 옳은 내용이다.
- ③ 법 제164조(보세구역의 자율관리) 제4항에 대한 옳은 내용이다.

13. ②

다음 각 호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할 때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청 또는 신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와 5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세법 제270조의2(가격조작죄) 다음 각 호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할 때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청 또는 신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와 5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8조의2 제1항·제2항에 따른 보정신청
2. 제38조의3 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
3. 제241조 제1항·제2항에 따른 신고
4. 제244조 제1항에 따른 신고

14.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지방공단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담보의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는 수입신고수리전 물품 반출과 관련된 표현이다(법 제252조).

선지분석

- ① 영 제257조(수입신고전 물품반출) 제2항 제1호에 대한 옳은 내용이다.
- ② 법 제253조(수입신고전의 물품 반출) 제3항에 대한 옳은 내용이다.
- ③ 법 제9조(관세의 납부기한 등) 제1항 제3호에 대한 옳은 내용이다.

15. ②

작업 허가를 받아 공장외작업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지정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보세공장에' 있는 것으로 본다(법 제187조 제5항).

선지분석

- ① 법 제187조(보세공장 외 작업 허가) 제4항에 대한 옳은 내용이다.
- ③ 법 제187조(보세공장 외 작업 허가) 제6항에 대한 옳은 내용이다.
- ④ 법 제187조(보세공장 외 작업 허가) 제7항에 대한 옳은 내용이다.

16. ③

무역위원회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비조사결과를 제출한 날의 다음날부터' 본조사를 개시하여야 하며, 본조사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본조사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영 제61조 제5항).

선지분석

- ① 영 제61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제1항에 대한 옳은 내용이다.
- ② 영 제61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제3항에 대한 옳은 내용이다.
- ④ 영 제63조(실질적 피해등의 판정) 제1항에 대한 옳은 내용이다.

17. ①

'판매'를 '사용'으로 바꿔야 한다.

관세법 제107조(관세의 분할납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세관장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다.

1. 시설기계류, 기초설비품, 건설용 재료 및 그 구조물과 공사용 장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소요되는 물품은 제외한다.
2.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3. 학교나 직업훈련원에서 수입하는 물품과 비영리법인이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4. 의료기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
5.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 및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연구기관에서 수입하는 기술개발연구용품 및 실험실습용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
6.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체가 직접 사용하려고 수입하는 물품.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이어야 한다.
7.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 직업훈련원에서 직업훈련에 직접 사용하려고 수입하는 교육용품 및 실험실습용품 중 국내에서 제작하기가 곤란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

18. ②

(다)를 '국내도매가격'으로, (라)를 범인으로부터 '추징'으로 바꿔야 한다.

관세법 제282조(몰수·추징)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몰수할 물품의 (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나) 범칙 당시의 (다)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라)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 다만, 제274조 제1항 제1호 중 제269조 제2항의 물품을 감정한 자는 제외한다.

19. ③

제시된 규정(법 제240조의2 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기록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법 제277조 제4항 제2호).

20. ④

재화·용역의 공급 또는 구매의 경우에는 당해 가격과 '시장가격'과의 차이에 의하여 발생하는 금액 상당액을 기준으로 보조금등의 금액을 산정한다.

관세법 시행규칙 제21조(보조금등의 범위) ③ 영 제7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등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지분참여의 경우: 당해 지분참여와 통상적인 투자와의 차이에 의하여 발생하는 금액 상당액
2. 대출의 경우: 당해 대출금리에 의하여 지불하는 금액과 시장금리에 의하여 지불하는 금액과의 차액 상당액
3. 대출보증의 경우: 당해 대출에 대하여 지불하는 금액과 대출보증이 없을 경우 비교가능한 상업적 차입에 대하여 지불하여야 하는 금액과의 차액 상당액
4. 재화·용역의 공급 또는 구매의 경우: 당해 가격과 시장가격과의 차이에 의하여 발생하는 금액 상당액
5. 기타 국제협약에서 인정하고 있는 기준에 의한 금액

간호관리학

[정답 채점하기]

1	2	3	4	5
③	④	①	①	①
6	7	8	9	10
④	①	①	①	④
11	12	13	14	15
④	②	①	④	②
16	17	18	19	20
③	②	②	④	③

1. ③
신규간호사 채용을 위해 병원에서 모집공고를 하는 것은 인사에 대한 내용이다.

2. ④
적신호 사건 발생 시 「환자안전법」 제14조에 따라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환자안전법」 제14조 【환자안전사고의 보고 등】 ①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또는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고 판단한 보건의료인이나 환자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의료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설명하고 동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2.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이 투여되거나 용량 또는 경로가 진료기록과 다르게 투여되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3. 다른 환자나 부위의 수술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4. 의료기관 내에서 신체적 폭력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보고(이하 “자율보고”라 한다)를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킨 사람이 한 경우에는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④ 자율보고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이하 “의무보고”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①
팀 구성원이 처음 만나 서로에 대한 다양한 탐색활동을 통해 서로 알기 시작하고, 팀의 목적 달성을 위한 초보적인 규칙을 정하며, 리더에 대한 구성원의 의존도가 높은 팀의 발전단계는 팀 형성기이다.

4. ①
우울증 환자의 자살은 사건보고서이다.

선지분석

② 위내시경 시술 건수, ③ 총 입원 환자 수, ④ 전과한 환자는 일일보고서이다.

5. ①

선지분석

② 인증은 절대평가이다.
③ 조사방법은 추적조사방법을 적용한다.
④ 이의신청은 30일 이내 가능하다.

6. ④
① 업무적 상대가치, ② 진료비용 상대가치, ③ 위험도 상대가치가 상대가치 수가제의 기본 구조이다.

7. ①
치매 대신 암이 포함되어야 한다.

8. ①

선지분석

② 환자의 중증도를 반영하기가 어렵다.
③ 입원환자 대 간호사 수는 5 : 2가 체제이다.
④ 시간과 동작의 산정이 가능한 방법은 산업공학적인 방법이다.

9. ①

선지분석

② 원격진료, ④ 홈 케어 개발은 유통이다.
③ 보험수가 책정은 수가이다.

10. ④

임파워먼트는 실무자들의 업무수행 능력을 제고시키고, 관리자들이 지니고 있는 권한을 실무자에게 이양하여 그들의 책임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구성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잠재 능력 및 창의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11. ④

- 간접간호방법은 폐기물 정리, 인수인계 및 수액정리이다. 총 간접간호시간을 더하면 $5 + 30 + 30 = 65$ 분이다.
- 직접간호방법은 산소요법, 활력징후 및 투약으로 $10 + 20 + 10 = 40$ 분이다.

12. ②

간호사의 신분 안정을 위한 관리의 원칙은 고용안정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13. ①

목표와 계획은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간결하고 명료하게 표현해야 한다는 것은 간결성의 원칙이다.

14. ④

관리감시도구를 이용하여 제시된 일정표와 실제 수행을 지속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수행·경과관리이다.

목표관리 과정	주요 활동
목표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조직목표를 확인하고 정의한다. • 전체 목표로부터 파생된 주요 부서목표를 확인하고 정의한다. • 조직구성원을 위한 운영목표를 확인하고 정의한다. • 특정한 일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방법을 만들고 제안한다. • 지속적인 관리 집담회를 연다. • 개인 목표와 개인 수행에 관한 합동조약을 한다. • 수행 검토를 위한 주기적인 회의 일정표를 작성한다. • 목표설정 기간은 6개월~1년이 가장 적당하다.

수행· 경과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 집담회 참석을 지속한다. • 관리 피드백, 새로운 억제책, 새로운 투자를 기초로 한 목표의 적용과 정돈을 시행한다. • 부적절한 목표 제거와 필요한 일정을 재조정한다. • 관리감시도구를 이용하여 제시된 일정표와 실제 수행을 지속적으로 비교한다.
결과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적과 목표달성을 관리자와 조직구성원이 함께 평가한다. • 새로운 계획을 위한 내년도 계획을 위해 조직과 부서의 전체적인 목표를 검토한다.

15. ②

영기준 예산제도는 조직체의 모든 사업과 활동에 대해 영기준을 적용하여 각각의 효율성과 효과성, 중요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실행 예산을 결정하는 예산제도이다.

16. ③

의사소통의 속도가 빠르고 단순문제 해결 시 효율적이고 효과적이지만 하위자들 간 상호작용이 없고, 모든 의사소통이 한 사람의 감독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조직의 의사소통 유형은 수레바퀴형에 대한 설명이다.

17. ②

프로젝트조직은 조직 내에서 특별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특별한 목적으로 설치된 조직이다.

18. ②

입원병상의 병원을 개설할 경우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19. ④

선지분석

- ① 이번 달 친절직원이 되기 위해 목표를 세운 것은 목표설정이론이다.
- ② 근무성적을 높이기 위하여 칭찬이나 금전 등의 보상 방법을 도입하는 것은 강화이론이다.
- ③ 업무 성적 결과에 대한 보상에 따라 생산성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기대이론이다.

20. ③

신규공무원이 선임처럼 훌륭한 공무원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은 준거적 권력에 대한 설명이다. 준거적 권력이란 다음과 같다.

- 높은 수준의 자질과 덕망을 보임으로써, 그를 존경하고 추종하고자 할 때 갖는 권력
- 자신보다 뛰어나다고 인식되는 사람을 닮고자 할 때 발생하는 권력
- 관리자가 구성원들에게 존경을 받는 것

지역사회간호학

[정답 채점하기]

1	2	3	4	5
④	③	①	③	④
6	7	8	9	10
①	①	③	④	③
11	12	13	14	15
②	②	①	①	③
16	17	18	19	20
③	①	②	①	①

1. ④

가정간호 업무 범위, 전문간호사의 자격인정 기준이 명시된 법령은 「의료법 시행규칙」이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24조 【가정간호】 ① 법 제3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의료기관이 실시하는 가정간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호
2. 검체의 채취(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현장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운반
3. 투약
4. 주사
5. 응급처치 등에 대한 교육 및 훈련
6. 상담
7. 다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건강관리에 관한 의뢰

②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간호사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가정전문간호사이어야 한다.

③ 가정간호는 의사나 한의사가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계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가정전문간호사에게 치료나 관리를 의뢰한 자에 대하여만 실시하여야 한다.

④ 가정전문간호사는 가정간호 중 검체의 채취 및 운반, 투약, 주사 또는 치료적 의료행위인 간호를 하는 경우에는 의사나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의사 및 한의사 처방의 유효기간은 처방일로부터 90일까지로 한다.

⑤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가정전문간호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⑥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가정간호에 관한 기록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⑦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가정간호의 질 관리 등 가정간호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78조 【전문간호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에게 간호사 면허 외에 전문간호사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전문간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분야 전문간호사 자격이 있는 자

③ 전문간호사는 제2항에 따라 자격을 인정받은 해당 분야에서 간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전문간호사의 자격 구분, 자격 기준, 자격 시험, 자격증, 업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③

정책 집행 준비단계: 집행계획의 수립, 집행 담당 조직 구성, 인사·예산 배정, 기타 관련 자원 지원 등의 단계로 구성한다.

3. ①

어린이에게 공공장소에서 소음을 내지 않도록 교육하며 지식, 가치, 행동 양상 등을 어린이들에게 전달하는 지역사회의 기능은 지역사회구성원의 사회화이다. 이는 지역사회가 공유하는 일반적인 지식, 사회적 가치, 행동 양상들을 새로이 창출하고 유지·전달하는 기능이다. 사회화란 인간이 동물적 인간에서 출발하여 사회적 인간으로 성장하기까지 이루어지는 일련의 모든 학습의 과정이다.

4. ③

영국의 윌리엄 라스본(Rathbone)

- 1859년 비종교적 형태의 방문간호사업으로 방문간호단을 조직하여 최초로 시작
- 아픈 사람 간호 + 사회 개혁자로서의 역할 수행
- 현재 지역사회간호사의 옹호자 역할과 유사

5. ④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14조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업무】 ① 법 제19조에 따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의료행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질병·부상상태를 판별하기 위한 진찰·검사
2. 환자의 이송
3.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및 응급조치가 필요한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4. 질병·부상의 악화 방지를 위한 처치
5. 만성병 환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6. 정상분만 시의 분만 도움
7. 예방접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의약품의 투여

②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의료행위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경위생 및 영양개선에 관한 업무
2. 질병예방에 관한 업무
3. 모자보건에 관한 업무
4. 주민의 건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 및 지도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주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업무

③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의료행위를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환자진료지침에 따라야 한다.

6. ①

국가보건의료체계의 5가지는 보건의료자원, 조직 및 배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재정지원, 관리이다.

선지분석

② 보건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재정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보건의료체계의 5가지 중 재정지원에 해당된다.

7. ①

개발도상국가와의 우호적인 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하고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은 한국국제협력단에 대한 설명이다.

8. ③

참여자 집단으로 선택한 중요 주제에 대해 사진을 찍고 논의함으로써 기존의 영·구주도형 연구방법으로는 얻을 수 없었던 새로운 시각을 얻고 정책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목적으로 하는 연구방법의 자료수집은 포토보이스에 대한 설명이다.

9. ④

문화적 차이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과 수용적인 태도가 문화적 민감성에 대한 설명이다.

선지분석

① 문화적 지식, ② 문화적 기술, ③ 문화적 인식이다.

10. ③

지역사회보건체계가 총체적으로 지역사회의 보건현황을 파악하고 보건문제에 대응하는 역량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모형으로, 주민참여를 강조하고 전략적인 기획 요소를 반영하는 보건사업기획모형은 MAPP 모형에 대한 설명이다.

11. ②

대상자를 둘러싼 환경을 포함하는 지리정보를 저장·통합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어 코로나19 감염증 환자의 이동경로를 추적할 수 있고 감염병 차단에 효과적으로 활용 가능한 보건정보시스템은 지리정보시스템에 대한 설명이다.

12. ②

Do(실행): 계획된 질 향상 활동을 수행, 자료수집을 한다.

선지분석

- ① Plan(계획): 질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 질 향상 활동의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 ③ Check(점검): 질 관리 향상 활동에 대한 결과값과 예측치 간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효과를 분석, 분석 결과 해석, 교훈 등을 점검한다.
- ④ Act(행동): 질 향상 활동의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13. ①

혁신적 정보기술의 발전에 기초한 온라인 학습과 상호작용적 참여를 동반하는 전통적인 학습이 통합된 형태인 블랜디드 러닝에 대한 설명이다.

14. ①

교토의정서에 의거한 온실가스 감축 제재 방법 중 할당된 온실가스 기준으로 잉여 및 초과 배출량을 매매하는 제도는 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15. ③

서로 상반된 찬성과 반대를 의미하므로 배심토의에 대한 설명이다.

16. ③

높은 사회적 물가와 이자율과 같은 현재 상황은 위기에 해당한다. SWOT이란 다음과 같다.

- 강점: 조직의 내부 환경에서 조직이나 사업의 목표달성에 도움이 되는 조직의 속성
- 약점: 조직이나 사업의 목표달성에 장애가 되는 조직의 속성
- 기회요인: 조직의 외부환경 중 조직이나 사업의 목표달성에 도움이 되는 요인
- 위협요인: 조직이나 사업의 목표달성을 저해하는 요인

17. ①

질보정생존년수의 경제성 평가 기준은 비용 - 효용이다.

18. ②

외부체계도는 가족을 둘러싼 다양한 외부체계와 가족구성원과의 관계를 그려봄으로써 가족과 외부와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19. ①

추진위원회 조직, 지역회의 개최, 실무 작업팀 구성, 지역사회 우선순위 파악 작업 실시는 1단계인 지역사회 조직화에 해당한다.

PATCH(Planned Approach To Community Health)

1단계 지역사회 조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위원회를 조직하고 지역회의를 개최하며, 실무 작업팀을 구성 • 구성되는 조직은 지역사회의 건강 우선순위를 파악하기 위한 작업부터 시작 • 충분한 자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PATCH에 대한 홍보를 함
2단계 자료수집 및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실무팀을 구성하여 첫 지역회의를 하면서 시작 • 자료는 실무 작업팀에 의해 분석 • 2단계 기간 중에 열리는 회의에서 발표되는데 지역사회의 주요 보건문제가 무엇인지 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 • 수집된 건강행동자료는 행동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토의가 있게 되는 3단계 기간 중의 회의에서 발표
3단계 우선순위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행동 자료나 기타 추가적인 자료가 검토되고 지역사회 집단에 제공 • 지역사회 집단은 질병이나 조기사망을 할 위험에 있는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정치적, 환경적 요인을 분석하며 그 결과에 따라 건강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대상집단을 선정함

4단계 포괄적인 중재안 개발	3단계에서 선택된 중재의 목표 설정, 중재 및 평가계획 개발, 주요 활동에 대한 일정표 준비, 자원봉사자의 모집과 훈련, 중재의 홍보와 수행, 중재결과의 지역사회 통보 등이 포함
5단계 평가	평가는 PATCH의 전체 과정에서 지속되며, 각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중재활동으로 인한 지역사회의 변화 확인 등으로 이루어짐

20. ①

자기감시법은 대상자가 내면적 행위나 외향적 행위를 한 후 자신의 행위를 기록하는 방법으로, 외부에서 관찰한 자료와는 다를 수도 있다.